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의 발전방향 모색

- 일 시 : 2008년 7월 28일(월) 14:00~18:00
- 장 소 : 충청남도청 대회의실

- 주최 : 충남발전연구원
- 주관 : 한국공공행정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 후원 : 충청남도



토론회 일정

- 등록 및 개회식(13:30~14:30) · 진 행: 강영주 기획정보팀장(충남발전연구원)
 - 개회사(14:00~14:05) : 충남발전연구원장
 - 축 사(14:05~14:10) : 참여학회회장 대표
 - 환영사(14:10~14:30) : 충청남도지사
- 제1세션(14:30~15:40) · 좌 장: 박철수 회장(한국지역경제학회)
 - 주제발표 1 :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행정·복지분야
- 발표자 : 조만형 교수(한남대학교)
 - 주제발표 2 :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산업·경제분야
- 발표자 : 박종찬 교수(고려대학교)
 - 지정토론
- 토론자 : 박종관 교수(백석대학교), 김영수 사무국장(충남기업인연합회)
유재일 교수(대전대학교), 심규익 사무국장(충남발전협의회)
이인희 논설위원(충청투데이)
- 중간휴식(15:40~15:50)
- 제2세션(15:50~17:00) · 좌 장: 정철모 회장(한국지역개발학회)
 - 주제발표 3 :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문화·환경분야
- 발표자 : 안성혜 교수(상명대학교)/최진하 단장(UNDP금강습지사업관리단)
 - 주제발표 4 :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지역개발분야
- 발표자 : 최봉문 교수(목원대학교)
 - 지정토론
- 토론자 : 강병수 교수(충남대학교), 임병천 사무처장(푸른충남21)
최호택 교수(배재대학교), 이인희 박사(충남발전연구원)
김학용 논설위원(중도일보사)
- 중간휴식(17:00~17:10)
- 라운드테이블(17:10~18:00) · 좌 장: 최병학 회장(한국공공행정학회)
 - 패 널
김태명 교수(한남대학교), 이 용 차장(대전일보사), 정진현 교수(청양대학)
방은희 회장(충남여성단체협의회), 김남호 교수(상명대학교)
- 만찬(18:00~)

목 차

제1주제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행정·복지 분야

I. 서론	3
II. 신공공관리주의 행정	4
III. 공공성 관리(Managing Publicness)	15
IV. 결론 :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23

제2주제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산업·경제 분야

I. 서론	29
II. 민선4기 전반기 산업·경제분야 충남도정의 성과 및 당면 과제	30
III. 민선4기 후반기 충청남도 산업경제 분야 충남도정 발전방향	41
IV. 결론	48

제3주제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문화·환경 분야

- 문화 분야

I. 서론	55
II. 전반기 문화 분야의 성과와 문제점	55
III. 후반기 문화 분야 도정방향	59
IV. 문화예술 중심의 가치창출 방안	63
V. 결론	72

- 환경 분야

I. 서론	75
II.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77
III. 결론	82

제4주제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지역개발 분야

I. 서론	87
II. 민선자치 10년의 충남 도정	88
III. 충남 지역개발의 변화요인 검토	91
IV. 민선4기 후반부 지역개발 방향제언	99
IV. 결론	105

제1주제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행정·복지 분야 -

조 만 형

(한남대학교 교수)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신공공관리에서 공공성 관리로 -

조만형 | 한남대학교 교수

I. 서론

- 공공행정은 언제부터인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민간기업의 행정 에 비교해서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공공행정이 민간부문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심지어 경영행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정부행정을 민간기업처럼 운용해야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 그러나 신공공관리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개인주의의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공공가치를 시장화(privatization)하여 공공부분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공공가치의 실현에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공공가치의 실현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으나,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은 공공가치를 실현하는데 정부보다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더 우수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필자는 진정한 공공가치의 실현은 공공행정(정부)이 담당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공공행정은 신공공관리보다는 공공성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에서도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에서 행정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충청남도의 경우에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개혁을 하였다. 신공공관리론적인 접근은 분명히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론에 담겨 있는 기본정신, 자율과 경쟁을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행정의 규범가치인 공공성의 책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공공관리의 내용과 한계를 논의한 다음에 대안으로 공공성 관리를 제시하여 향후 충청남도 행정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신공공관리주의 행정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¹⁾

- 1980년대 신보수주의 국정관리패러다임
 - 구(舊)패러다임(케인지안 경제정책, 복지국가, 공기업의 국유화, 고전적인 경제규제, 누진적인 소득세, 전통적 행정학)에서 신공공관리론의 신(新)패러다임(통화주의, 복지국가 감축, 민영화, 규제완화, 균일 조세)으로 전환
 - 신보수주의 정권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한 변화는 이른바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의 시도
- 신공공관리론은 신제도주의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과 경영혁신전략의 유행에 큰 영향을 받음
 - 독점보다는 경쟁성, 공급자 중심주의 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
 -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과 이의 연장선에 있는 대리이론(agency theory)

1) 김근세(2008)의 발표논문을 참고로 재구성

- 공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제적인 개념들, 즉 고객, 서비스,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정부 관리의 대안적인 시각을 제시

2) Hood(1994)의 신공공관리론

- Hood(1994: 129)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 내용을 고위 행정가의 정책결정 기능보다는 관리능력을 중시, 파정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계층적 내부생산에서 계약적 경쟁체제로, 고정 임금에서 변동 임금으로의 행정개념의 변화로 요약
- 신공공관리론은 전통행정이론의 두 기본적인 가정인 공공조직의 특수성과 절차 및 규칙의 중요성 대신에 공사 조직의 유사성과 관리자율성 및 결과 중심의 관리를 강조
-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주의와 계약주의의 결합으로 이해됨
 - 관리주의(managerialism)는 관리자에게 관리재량권을 주자는 입장이다. 조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관리지식이 필수적이고,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유재량권한이 요구된다.
 - 계약주의(contractualism)는 관리자가 관리하게 만든다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다. 신제도주의경제학, 공공선택이론, 거래비용이론, 대리이론에 기반하여 공무원에 대한 막연한 신뢰감 대신에 분명한 성과계약관계를 강조한다. 경쟁가능성, 소비자 선택권, 투명성, 유인장치에 대한 개혁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 Hood(1991 & 1995)는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이론적인 요소를 <표 1>와 같이 7가지로 정리
 - 앞의 네 가지 요소는 공공관리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일반론적 관점이고, 뒤의 세 가지는 관리자의 자유재량권을 강조하는 관리 전략

<표 1>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구성요소

	이념	정당화 논리	전통이론의 대체	행정운영의 의미
공공부문의 독특성 대 유사성				
1	산출물에 기초한 조직분화	관리가능한 단위, 공급-생산 이해 분리, 책임소재 집중, 계약 및 분사에 따른 능률성	책임성의 중첩을 피하기 위한 통일적이고 내포적 조직	단일 공직체계의 약화, 독립적 조직간 관계, 예산의 위임, 보다 많은 비용단위
2	경쟁 도입	경쟁에 따른 비용절감과 서비스질 향상, 계약에 따른 성과기준의 명시화	모호한 고용계약, 무제한적 공급, 공급-생산의 연계	일차적 이차적 공무원 인력의 구별, 비용구조에 대한 파악, 협력적 행태의 어려움
3	민간관리기법 수용	입증된 민간관리기법의 도입 필요성	공직윤리 강조, 고정급, 공식적 채용규정, 모범적 고용주, 집권적 인사구조, 종신고용	공무원 봉급의 이중적 불균형, 종신고용, 비금전적 보상, 공정한 절차의 피고용자권한에서 탈피
4	자원이용의 규율과 절약	공공부문 자원수요의 건제 필요성,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성과	안정적 예산토대와 제도화, 최소한의 서비스기준, 노조의 거부권	직업안정성 약화, 생산자 우호적인 방식 약화, 순수입 강조
규정 대 재량				
1	관리자율성	책임성에 따른 권한부여, 권력의 분산 방지	적극적 관리보다는 정책 기술과 규정예의 강조	재량권한에 따른 관리자율성, 내부규제완화
2	공식적 성과기준	책임성을 위한 분명한 목표설정, 능률성을 위한 목표의 객관화	정성적이고 묵시적인 성과기준 및 규범	전문가의 자율관리 약화, 성과지표와 감사
3	산출통제	절차보다는 결과 강조의 필요성	절차의 통제 강조	성과기준의 예산, 성과급, 포괄적 예산편성과 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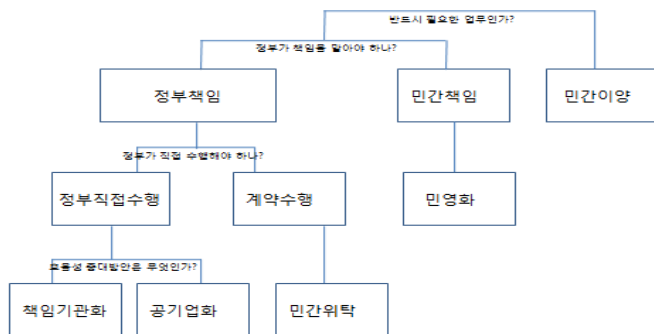
출처: 김근세(2008)의 논문을 재인용

3) 신공공관리론의 특성²⁾

(1) 경쟁

- 시장지향적 경쟁원리를 효율성 제고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
 - '시장이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 신고전경제파의 관점에서 경쟁은 정부부문보다 시장(민간부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이나 위계질서에 의한 직접제공보다는 계약과 같은 간접방식 선호
 - 일련의 '시장성 테스트' 기준에 따라 업무를 평가한 뒤 민영화, 민간위탁(계약), 공기업화, 책임기관화 등의 대안을 선택

<그림1> 시장성 테스트



- 시장원리의 적용은 정부 내에서도 적용
 - 내부시장을 만들어서 정부 내의 거래에도 비용개념과 경쟁원리를 적용하여 외부시장의 효과를 내하고자 한다.
 - 조직 내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게까지 개방하여 경쟁시키는 사례

2) 이 부분은 유민봉(2005)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2) 성과

- 신공공관리는 성과 중심의 관리를 강조
 - 규제나 절차를 중시하는 통제 중심의 관리를 탈피하여 얼마나 일의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강조
 -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재량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
 - 인사, 예산, 구매 등 관리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관리자에게 재량권한을 부여한 자율경영
- 경직적인 조직과 자원관리에서 탈피하여 탄력적 운영을 중시
 - 부처의 경계에 매이지 않고 거시적으로 정책을 접근할 수 있도록 고급공무원 통합(고위공무원단), 예산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배정은 위임(지출통제예산), 기관장의 책임하에 조직, 인력,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권한을 위임(책임운영기관)
 - 주어진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길이 다양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관리와 재량을 중시
-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과 목표달성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
 - 성과측정은 전통 행정에서 목표의 모호성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졌으나 신공공관리는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효율성의 제고는 불가능하다는 믿음
 - 성과 중심의 관리에서는 측정은 기본이고 그것을 어떻게 인센티브와 불이익으로 연결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가가 중요한 관심사
 - 성과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측정 결과를 예산배정이나 인사관리에 연계시킨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중요

(3) 고객

- 민간부문의 경영방식을 적용하여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 자 하는 것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고객중시 정신
-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정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행정서비스현장 : 단순히 서비스 정신을 선언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과목표를 명시하고 서비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 민간부문의 경영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믿음
 - Total Quality Management, Benchmarking, BPR, 6 Sigma 등
 - 회계방식도 발생주의 원칙을 따름으로 현금을 지불한 시점(현금주의원칙)이 아니라 비용발생의 행위가 일어나 시점에 비용으로 기록함으로써 제정의 흐름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정하게 운용

2. OECD 국가들의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

- OECD의 공공거버넌스 위원회는 2002년부터 회원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 현대화 활동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2006년도에 「Modernizing Government」(정부혁신 패러다임: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OECD정부혁신아시아센터 위임)로 출판했다. 주로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에서 정부혁신의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방형 정부

- 개방형 정부의 의미
 - 투명성 : 정부의 활동과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공감시

- 접근가능성 : 정부의 활동에 따른 서비스와 정보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 대응성 : 새로운 아이디어와 요구, 필요에 신속히 반응
- 투명한 정부 : 확대되는 공공감시에 노출되는 정부
 - 정보공개법
 - 정부 성과에 대한 개방
 - 온라인 정보공개
- 보다 접근성 있는 정부 만들기
 - 행정절차법을 통합 접근
 - 고객현장을 통한 접근
 - 관료직 형식주의 깨기
 - 장벽제거 및 사회통합 촉진하기
 - 정부에 대한 온라인 접근
- 대응성 있는 정부 구축
 - 이해관계 집단의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요구를 반영
 - 공공협의 이용의 확산

(2) 공공부문의 성과 향상

- 정부관리, 예산, 인사, 조직구조에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성과를 향상
 - 예산과 정부관리에 성과 측정 방식의 도입
 - 투입지향적 통제의 완화
 - 일선 기관에 대폭적인 권한의 위임
 - 계약직 공무원제 채택 및 성과 보수에 의한 인사관리
 - 책임행정기관 설치, 공공부문 민영화, 아웃소싱

○ 성과주의 예산과 성과관리

- 예산, 관리, 책임의 중심을 투입에서 산출 또는 결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 정부관리자와 조직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받는 대신 산출물과 정책효과로 나타난 실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스템

○ 성과관리의 현재 추이

- 67%의 국가에서 장관 또는 부서장이 공식적 성과목표 설정
- 56%의 국가에서 목표 대비 성과를 해당 부처 내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63%의 국가에서 일부 또는 대부분 사업의 목표 대비 성과를 체계적으로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보고

(3) 책임과 통제의 현대화

○ 사전통제에서 사후통제로

- 사전통제에서 사후통제로의 이동은 계약과 지출을 사전에 외부 감사관이 승인하던 체계에서 내부의 관리자가 재정적 자원배분을 결정하고 집행해서 사후에 점검하는 체제

○ 외부통제에서 내부통제로

- 외부통제는 중앙감사기관 혹은 독립적인 감사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감사
- 내부 통제는 활동의 적법성, 규칙성,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경제성에 대해 상부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절차, 법규와 구조

○ 이러한 통제방식의 전환은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개별 계약의 규칙성과 적법성을 확실히 점검하던 방식(외부통제)과, 효율적이지만 적절한 시스템 운영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는 방식(사후통제)을 상호 보완

(4) 기능 재배분과 조직 재구성

- 지난 20년간 중앙정부 내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조직적 변화는 책임운영기관을 설립하거나,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통적인 부처로부터 분리된 기관에 상당한 자율권 위임
- 일부 자료에 의하면 몇몇 OECD 국가에서 책임운영기관은 현재 정부 예산과 인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최상층의 운영 거버넌스 구조, 상이한 조직 환경 관리, 관리측면의 부분적 자율성

(5) 시장형 메커니즘의 활용

-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장형 메커니즘을 채택하여 활용하는 OECD 회원국들이 늘어가는 추세
 - 정부가 운영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기인
 - 시장형 메커니즘이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실질적 증거가 많음
- 시장형 메커니즘은 시장의 주요 특징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총칭
 - 아웃소싱 : 정부가 민간부문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제공해 오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민간부문이 자금조성, 설계, 건설, 유지, 운영 등을 담당하는 것
 - 서비스 교환권(voucher) :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자금 조성을 분리하는 것으로 개인들은 발급받은 서비스 교환권을 가지고 다양한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교환

(6) 공무원의 조직화와 동기부여

- 지난 20년간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성과와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향상하는 과정에서 공직의 적정한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의문이 제기
- 일부 국가에서는 평생 고용 보장의 제고, 경쟁을 통한 등용, 단체 협상으로부터 직장 또는 개인 단위의 임금협상으로 전환, 또한 정기적으로 감축관리
- 인사관리 기능의 이양, 중앙기관의 역할 축소, 일선 부서로의 인사관리권 이양, 책임과 성과 강화 및 개별화를 통한 탄력성과 자율성 제고

3. 우리나라에서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1)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 성과관리체계
 - 기본구조 : 계획, 집행, 평가, 환류
 - 성과관리계획의 구성요소 :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 관리과제 : 주요정책과제, 재정사업

○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 전략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시계의 중장기 계획
-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계획

2) 정부업무평가제도

-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
 - 평가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공기관 등
- 중앙행정기관 :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성
 - 자체평가 :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
 - 특정평가 :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특정과제분석
-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등

3) 충청남도의 사례

(1) 「성과중심」의 도정운영 체계 구축

- 성과위주의 조직운영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인재양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도정 운영
- 성과창출을 위한 명품도정 추진
 - 「실국장 책임경영제」 확대 : 10개 실국 → 16개 소 실국
 - 출연기관 경영평가(12개 기관 대상)

-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예산절감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구축
 - 예산절감 T/F구성 : 다양한 절감방안 마련(120억 원 목표)

(2) 「인사·조직운영 시스템」 개선

- 인사운영 개선방안 마련 시행(6. 21)
- 道 조직개편 및 중기 기본인력계획 수립 등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개선 12大 과제」 추진
 - ▶ 실·국장 책임경영제 지원, 발탁승진·특별승급 추진, 다면평가제 개선, 직위공모제 확대 등
- 道 조직개편(來年初) 및 총액인건비제 재정운영프로그램 개발
- 道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5년간, 연동계획 : 6~8월) 등

III. 공공성 관리(Managing Publicness)

1. 공공성(Publicness)

1) Rainey(2003)

- 공공조직의 특성을 환경적 요인, 조직의 특성, 그리고 조직내 구조와 과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
 - 이 중에서 공공행정(조직)의 공공성은 경제적, 법적, 정치적 환경의 맥락으로 구성
 - 민간조직과 비교해 공공조직 자체의 특성으로 강제력, 광범위한 영향력, 많은 감시감독 및 책임성, 복합적이고 갈등적인 행정가치의 기대라는 공공성의 속성을 가짐
- 공공조직의 표준적 속성은 두 가지 가정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Pesch, 2005: 88-89).

- 첫째, 민간조직은 정상(normal) 조직이고, 공공조직은 이상(deviant) 조직이다. 즉 공공조직이 민간조직의 표준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목한다.
- 둘째, 공공조직은 민간조직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열등하다. 즉 공공조직이 갖는 정치적, 경제적, 법적 환경의 제약이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에 주목한다.

○ 공공행정(조직)의 특수성

환경적 요인들

- 산출물의 경제적 시장 부재: 예산 배정
-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등 공식적인 법률적 통제 존재
- 복잡한 정치적 영향력 존재

조직-환경간 상호작용

- 공공재의 생산/제공
- 정부활동들은 강제적, 독점적, 필연적인 성격
- 정부활동은 광범위한 영향력과 상징성, 공익성
- 공공관리자들에 대한 큰 공식적 감독이 존재함
- 공정성, 대응성, 정직성, 개방성, 책임성에 대한 독특한 기대

공공조직 구조와 과정의 특성

- 목표의 불명확성, 복잡성과 갈등
- 일반 관리자의 역할과 구별되는 특징 : 정치관리자
- 관리제량 권한의 제약
- 관료제적 조직구조
-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
- 제한된 인센티브 구조
- 낮은 직무태도
- 혁신성과 효과성이 낮음

2) Wamsley & Zald(1973)

- 공공조직의 공공성을 정치적(소유권) 그리고 경제적(재원) 측면에서 접근
- 정치란 정당성과 권력분배와 관련된 것으로 기관 존재의 특성, 정치사회시스템에서 차지하는 기능의 적소, 집합적인 제도적 목표, 지배엘리트 분파의 목표 등을 포함한다.
 - 조직의 정치적 성격은 소유권(ownership)을 핵심개념으로 측정한다.
 - 공공조직은 시민과 지배엘리트가 권리를 갖고, 사회전체의 대표성을 주장하는 국가가 소유한 것이고, 민간조직은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한 것
- 경제란 생산요소의 조합, 분업의 장치, 과제달성을 위한 자원배분, 능률성의 극대화를 의미
 - 조직의 경제적 성격은 재원(funding)을 핵심개념으로 측정
 - 공공조직은 재원을 국가예산 배정에 의존하고, 민간조직은 시장에서 조달.
- 이러한 소유권과 재원에 따라 <표 2>와 같이 공공-공공, 공공-민간, 민간-공공, 민간-민간의 네 가지 성격의 조직유형으로 분류
 - 여기서 민간-민간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은 공공성을 가지며 공공행정 연구의 대상 조직이 된다. 즉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독특한 행정 및 조직 특성을 가지게 됨

<표 2> 공공조직의 공공성: 소유권과 재원

	공적 소유권	사적 소유권
공적 재원 (세금, 정부계약)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사립학교
사적 재원 (판매, 개인기부)	공기업 대중교통	민간기업

출처: Wamsley & Zald(1973: 10), Rainey(2003)

3) Bozeman(1987)

- 기존의 공·사조직의 비교의 방법론인 일반론적인 접근방법 (generic approach) 또는 이분법적 접근방법(binary approach) 등에 문제를 제기
- 대신 공공성(publicness), 시장성(privateness)라는 기준으로 공·사조직을 구분하는 차원론적 접근(dimensional approach)
 - 공공성 : 국가의 공적 권한(public authority)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
 - 시장성 : 시장의 교환 관계에 따른 경제적 권한 (economic authority)의 영향을 받는 정도
- 공공조직은 공식적 법적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정도의 차이로 볼 수 있음
 - 공사조직의 구분은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다
 - 모든 조직은 공조직이면서 동시에 사조직이다
 - 자원의 공공성, 생명주기의 공공성, 조직의 공공성, 목적의 공공성

2. 공공가치(Public Values)

1) 공공가치의 의미

- 공공가치는 공공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공공성, 공익, 행정 이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유민봉, 2005).
 - 공공성 : 공개성, 공익성, 권위성
 - 공익성 : 실제성(전체효용의 극대화, 절대가치, 공유의 이익)과 과정 설(다수 이익들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 적법절차의 준수)
 - 행정이념 : 합법성과 민주성, 형평성, 능률성과 효과성 등
- 한 사회가 추구하는 공공가치는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한 규범적 합의를 의미함(Bozeman, 2007)
 -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 편익, 특권
 - 시민들이 사회, 국가 또는 서로간의 의무
 - 정부와 국가정책의 바탕이 되는 원리

2) 공공가치의 분류

- 공공부문의 사회에 대한 공헌
 - 공공재, 공익, 사회통합, 이타주의, 인간존엄성, 지속가능발전, 체제 안정 등
- 사회적 의사결정
 - 다수의결, 민주주의, 민의, 공공선택, 거버넌스, 시민참여, 소수의견 보호, 개인권리 보호 등
- 행정과 정치의 관계
 - 정치적 충성, 책무성, 대응성 등
- 행정과 환경의 관계
 - 개방과 기밀, 의견수렴, 타협, 이해의 균형, 경쟁과 협조 등
- 행정의 조직내부

- 신뢰성, 적응성, 안정성, 적실성, 혁신성, 생산성, 효과성 등
- 공직자의 행태
 - 책임성, 전문성, 정직성,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 등
- 행정과 시민과의 관계
 - 합법성, 개인권리 보호, 형평성, 법의 지배, 정의, 공정성 등

3. 공공성 관리(Managing Publicness)

1) 공공성 관리의 의미

- 공공성 관리란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의 관점에서 공공가치 실패(public value failure)를 피하기 위해서 정책과 관리에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것
 - 규범적 공공성 :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영향력이 정책과 제도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지식은 그러한 정책과 제도가 공공가치를 실현시키는 잠재력을 이해하는데 선행조건
 - 공공가치 실패 : 정부나 시장이 공공가치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
- 공공성 관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공공가치를 정책과 관리에 최우선적으로 반영

- 공공성 관리는 공공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며 다른 가치들과 타협되거나 비교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님
- 공공관리자들은 가끔 예산이나 정치적 중립, 법적 통제 등의 제약 때문에 공공가치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소의 범위에 한정해야 한다.

고객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관리

-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아닌 시민을 위해서 국정을 관리
- 시민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가지며 주권자이기 때문에 고객과는 다르다.

공공성 관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이 없다

- 공공성 관리는 의도적으로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을 피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음
- 공공가치를 실현하는데 민간부분이 더 바람직하다면 정부보다는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공공성 관리는 공공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시장보다는 정부가 공공가치를 실현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입장

정부가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해야 가능

- 정부를 지나치게 비난하고 시장을 우선시하는 현상은 자칫 잘못하면 공공가치를 실현할 정부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정부기관이나 관료의 비난은 예산이나 인력 등의 감축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조직의 역량이 축소되고 따라서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악순환 구조가 됨

정부관료들이 거래비용의 화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거래비용에는 당사자간에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비용 등이 포함
- 근래에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제공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이를 통제하는 데 드는 외부비용의 거래비용이 부각되면서 민간위탁 등의 대안이 힘을 받음
- 거래비용이 외부시장보다 조직 내부의 명령체계나 계층적 질서에서 더 적게 발생한다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에 정부가 더 적합한 형태

공공서비스에 대한 헌신과 동기

- '경영행정'이라는 구호는 공무원이 가진 '공공서비스 정신'이라는 귀중한 자산을 망각하게 함
- 민간기업의 직원들과 비교해서 공무원들은 '사회에 유익한 일'이나 '타인을 도와주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됨
- 공무원들은 공익에 대한 그들이 견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직에 근무함

2)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1) 신공공관리론의 한계(김근세, 2008)

- 책임운영기관화, 민간위탁 등 정부조직의 기능적 분화 전략에 따라 기관차원의 관리효율성은 개선되지만, 정책과정의 복잡성이 더욱 증가됨으로 이에 대한 국가행정기구의 정책 조정 및 통합이 어려워진다. 나아가 일반 시민의 국정과정에 참여라는 행정민주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나친 정부조직의 민간화는 핵심적인 국가의 정책능력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 둘째, 신공공관리론은 좁은 의미의 행정책임성을 강조하게 될 위험이 있다. 대리이론에 기초하여, 정치집행부의 정책의도대로 일선 행정기관은 측정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받는, 즉 상관과 부하간의 관료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행정업무의 수행에 있어 법적 책임성, 관료의 전문가적 책임성은 어떠한지, 나아가 정부의 기능수행이 갖는 헌법성과 사회계층과 관련된 정치적 책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공공재의 상품화, 시민의 소비자화, 민영화는 국가의 시장화(marketization of state) 전략으로 시민의 정치적 성격을 훼손시킨다. 시민권은 개인과 정치공동체간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이를 간

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행정에 소비자의 개념의 적용은 개인간의 불평등을 합리화시켜 주는데, 이는 시민권과 관련된 동등하고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의 개념과 배치된다.

- 넷째, 신공공관리론은 성과보너스 등과 같은 공무원의 외재적 동기 부여 요인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데 지나친 외재적 동기부여의 강조는 이것으로 공무원의 내재적 동기부여를 대체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예산감축 시대에 금전적 보너스의 활용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신공공관리와 공공성 관리의 차이

- NPM은 경제적인 개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 공공성 관리는 공공가치와 공익에 뿌리를 둔다.
- NPM은 시장을 선호하고 시장지향적 거버넌스를 추구
 - 공공성 관리는 공공가치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
- NPM은 인력을 감축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
 - 공공성 관리는 정부역량을 유지하고 민간위탁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
- NPM은 이론->처방->행동으로 발전
 - 공공성 관리는 문제 규명(공공가치실패)->행동(공공가치 추구)->잠정적 이론(상황적 공익)으로 발전

IV. 결론 :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 신공공관리론은 1990년대에 등장한 개념으로서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에서 유행했던 이론이지만 이미 이런 나라에서마저도 신공공관리

론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다. 공공부분이 갖는 공공성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유행을 따라서 민간경영을 마치 정부행정과 동일시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신공공관리론은 공공가치의 실현에 실패하는 공공가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정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가치의 실현이라는 기초에서 공공성과 공공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공성 관리를 신공공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이론으로 제시했다. 향후 정부행정에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여기서 논의한 공공가치는 그러한 가치의 문제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다룬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공공행정의 관점을 관리적 관점, 정치적 관점, 사법적 관점의 차이에서 접근하여 각 관점이 가지는 가치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근세 (2008), '신공공관리론과 공공성,' 한국행정연구원 발표원고.
2. 유민봉 (2005), 행정학, 박영사.
3. Bozeman, Barry (2007), Public values and public interest, Georgetown University Press.
4. Hood, C. (1995). "The New Public Management in the 1980s: Variations on a Theme",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0(2/3).
5. OECD (2005), Modernising Government: The Way Forward.
6. Rainey, H. (2003).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 3rd. San Francisco: Jossey-Bass.
7. Rosenbloom, David H. (1986). *Public Administration*, Random House.
8. Wamsley, G. and M. Zald. (1973).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Organizations*. Lexington: Lexington Books.

제2주제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산업·경제 분야 -

박 종 찬

(고려대학교 교수)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산업 · 경제 분야 -

박종찬 | 고려대학교 교수

I. 서론

- 충남경제는 지난 10여 년간 국내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고도성장을 오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민선4기 이완구지사의 취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 충남의 1인당 GRDP는 07년에는 95년의 11.7백만 원의 두 배가 넘는 25.7백만 원을 달성해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는 급신장을 이루어냈다.
- 이러한 고도경제성장의 배경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농림어업이 주된 산업구조로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주요한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성장동력 산업이 충남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관련 중소기업도 충남에 입지를 하게 된 것이 주효했다.
-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은 이완구지사가 취임한 민선4기 이후에도 많은 기업유치 및 외자유치를 통해 속도를 높여 가고 있다.
- 그러나 충남경제는 이러한 괄목할만한 거시경제 지표상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내의 균형발전 문제, 도민 삶의 질과 도내 경제성장

의 연계문제, 인구의 고령화,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새롭게 제시된 정책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광역경제권 구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 등 충남경제의 민선4기 후반기 정책 운용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요소들도 있어 이를 반영한 새로운 지역경제정책 운용방향의 모색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본 발표에서는 II장에서 민선4기 전반기 산업경제 분야 충남도정의 평가 및 과제를 정리하고, III장에서는 민선4기 후반기의 충청남도를 둘러싼 변화된 경제 환경 아래서 산업경제 분야에 있어서 충남도정의 발전을 SWOT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결론으로 발표의 내용을 정리하고 민선4기 후반기 산업경제분야 충남도정 운용 방향에 대해 이완구 지사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하면서 마무리 한다.

II. 민선4기 전반기 산업 · 경제분야 충남도정의 성과 및 당면 과제

- 앞의 서론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민선4기 상반기 충남경제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장에서는 민선4기를 포함한 최근의 충남의 산업경제분야 주요한 성과를 정리해보고 특징과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요약한다.

1. 민선4기 전반기 산업경제분야 충남도정의 주요성과

- 1) 민선4기 전반기 충남의 산업경제분야의 주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고도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 아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광역시도 전체 GRDP를 기준으로 비교해본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5년에 전국 총GRDP의 4.3% 비중에서 2006년에는 전체 GRDP의 5.9%를 차지하면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이루어냈다.

<표 1> 광역시도 GRDP(2000년 기준년 가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995년	구성비	2000년	구성비	2006년	구성비
서울	127,110,656	26.2%	138,492,266	24.0%	193,775,894	22.6%
부산	32,500,602	6.7%	33,839,838	5.9%	48,136,226	5.6%
대구	20,364,899	4.2%	20,776,260	3.6%	27,873,093	3.3%
인천	25,247,368	5.2%	26,230,654	4.5%	40,607,303	4.7%
광주	11,386,933	2.3%	12,628,813	2.2%	19,049,436	2.2%
대전	11,617,775	2.4%	13,559,020	2.3%	19,514,915	2.3%
울산	-	0.0%	28,355,275	4.9%	41,226,660	4.8%
경기	85,755,745	17.7%	111,793,461	19.3%	174,209,311	20.3%
강원	14,800,680	3.0%	16,462,239	2.8%	23,540,583	2.7%
충북	15,153,938	3.1%	19,521,392	3.4%	27,396,126	3.2%
충남	20,941,551	4.3%	28,962,820	5.0%	50,781,984	5.9%
전북	16,819,535	3.5%	18,977,807	3.3%	26,311,795	3.1%
전남	23,929,502	4.9%	26,907,552	4.7%	41,456,253	4.8%
경북	29,586,021	6.1%	38,445,650	6.7%	57,519,309	6.7%
경남	45,360,747	9.3%	37,728,411	6.5%	5,7196,865	6.7%
제주	4,917,682	1.0%	5,289,484	0.9%	7,596,131	0.9%
(전국 계)	485,493,634	100.0%	577,970,942	100.0%	856,191,884	100.0%

자료 : “충청권의 지역경제 분석”, 지역 내 총생산 및 지출, 각 년도, 통계청.

- 또한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보면 1995년 이후 약 10년 만에 1인당 GRDP가 두 배 이상 급신장하여,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충남은 70년대와 80

년대 한국의 산업메카로 부상한 울산에 이어 90년대와 2000년대에 한국의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충남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게 됨으로써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주요한 산업을 갖게 되면서 연관 중소기업이 함께 입지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표 2> 광역시도 1인당 GRDP(2000년 기준년 가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인당 GRDP		
	1995년	2000년	2006년
서울	12.4	14.0	19.0
부산	8.5	9.2	13.3
대구	8.3	8.4	11.2
인천	10.9	10.6	15.5
광주	9.1	9.3	13.5
대전	9.1	9.9	13.3
울산	-	28.0	37.7
경기	11.2	12.4	16.0
강원	10.1	11.1	15.6
충북	10.8	13.3	18.3
충남	11.9	15.7	25.7
전북	8.8	10.0	14.1
전남	11.6	13.5	21.3
경북	11.1	14.1	21.4
경남	15.8	12.7	18.0
제주	9.7	10.3	13.6
(전국 계)	10.9	12.5	17.5

주 : 지역 내 총생산/지역별주민등록인구

자료 : “충청권의 지역경제 분석”, 지역 내 총생산 및 지출, 주민등록인구 각 년도, 통계청.

- 이러한 경제적 성장의 결과는 천안, 아산, 서산, 그리고 당진을 비롯한 충남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및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유치 및 성장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 충남의 인구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 광역시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1995년	구성비	2000년	구성비	2006년	구성비
서울	10,231,217	22.9%	9,895,217	21.4%	10,181,166	20.8%
부산	3,814,325	8.6%	3,662,884	7.9%	3,611,922	7.4%
대구	2,449,420	5.5%	2,480,578	5.4%	2,496,155	5.1%
인천	2,308,188	5.2%	2,475,139	5.4%	2,624,391	5.4%
광주	1,257,636	2.8%	1,352,797	2.9%	1,407,798	2.9%
대전	1,272,121	2.9%	1,368,207	3.0%	1,466,158	3.0%
울산	967,429	2.2%	1,014,428	2.2%	1,092,494	2.2%
경기	7,649,741	17.1%	8,984,134	19.5%	10,906,033	22.3%
강원	1,466,238	3.3%	1,487,011	3.2%	1,505,420	3.1%
충북	1,396,728	3.1%	1,466,567	3.2%	1,494,559	3.1%
충남	1,766,854	4.0%	1,845,321	4.0%	1,974,433	4.0%
전북	1,902,044	4.3%	1,890,669	4.1%	1,868,365	3.8%
전남	2,066,842	4.6%	1,996,456	4.3%	1,942,925	4.0%
경북	2,676,312	6.0%	2,724,931	5.9%	2,688,577	5.5%
경남	2,878,193	6.5%	2,978,502	6.5%	3,172,857	6.5%
제주	505,438	1.1%	513,260	1.1%	558,496	1.1%
(전국 계)	44,608,726	100.0%	46,136,101	100.0%	48,991,779	100.0%

자료 : “충청권의 지역경제 분석”,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 년도, 통계청.

<표 4> 충남의 외국인투자 유치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 수	47	38	41	26	42	70	52	8
유치액(억달러)	2.6	4.9	5.8	7.0	12.0	3.3	13.7	12.4

주 : 신고기준
자료 : 충청남도

<표 5> 충남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MOU 체결현황(2007년중)

기업명	체결일	생산품	위치	유치액(백만달러)
O O C (오 만)	3. 22	LNG 발전소	당진	30
B O C (영 국)	3. 28	반도체용 특수가스	아산	10
M a t h e s o n 트라이가스(미국)	3. 28	반도체용 특수가스	아산	24
CEPSA (스페인)	7. 9	석유화학	서산	935
Rohm & Haas(미국)	9. 28	LCD 필름	천안	175
Rohm & Haas(미국)	9. 28	LCD 부품	천안	4
U F I (이 탈 리 아)	10. 9	자동차 연료필터	아산	10
Air Liquide(프랑스)	11.13	산업용가스	당진	50

자료 : 충청남도

2) 민선4기 전반기 업적 가운데 또 하나는 외자유치 및 기업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적을 보여준 것이다.

○ 충남경제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중국의 개발에 따른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 그리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 등 기업입지의 유리한 조건을 배경으로 국내외 기업의 유치가 활성화된 데 기인한다.

- 외국인투자 유치액은 2000년 2.6억 달러에서 2007년 12.4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07년에도 반도체, LCD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 또한 수도권과 인접한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기업입지의 유리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규제외 여파로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하는 기업을 기업입지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아래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기업을 충남에 자리잡게 만들었다. 특히, 민선4기 상반기인 2007년에는 1,004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유치 건수도 2000년 400건 수준에서 2007년 1,000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표 6> 충남의 국내 기업유치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 수	394	632	860	665	482	548	495	1,004

자료 : 충청남도

- 3) 이러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결과 충남지역 산업구조가 전통적인 농업도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충남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역경제성장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하면서 주요 성장동력 산업을 이끌게 되었다.

- 충남의 연평균 제조업 성장률은 1995~2000년중 7.9%(전국 4위)에서 2001~2006년에는 지자체중 가장 높은 11.1%로 상승하였다.

<표 7> 제조업 성장률 (기간중 연평균)

(단위: %, %p)

구 분	1995~2006	1995~2000	2001~2006
충 남(A)	9.5	7.9	11.1
전 국(B)	6.3	6.0	6.6
A - B	3.2	1.9	4.5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2001~2006년 사이 제조업의 GRDP 성장기여율도 53.5%에서 63.7%로 상승하여 여타 산업을 압도하면서 제조업의 성장이 충남 경제성장의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충남의 산업별 GRDP 성장기여율1)

(단위 %)

	1995~2006	1995~2000	2001~2006
농 립 어 업	2.2	6.0	0.3
광 업	0.2	0.2	0.1
제 조 업	60.3	53.5	63.7
전 기 · 가 스 · 수 도 사 업	7.9	11.0	6.4
건 설 업	5.7	-1.1	9.2
서 비 스 업	23.7	30.5	20.3

주 : 1) 산업별기여율=(산업별GRDP변동분/전체GRDP변동분)×100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01~2006년 중 충남지역 제조업의 GRDP 성장기여율은 16개 지자체 중 경북(71.2%), 울산(70.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충청남도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정착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 결과적으로, 충남 산업구조 변화추이('95→2005년, 부가가치 기준)를 보면, 농림어업(14.1→7.3%), 광공업(28→45.0%), 서비스업(57.9→47.7%) 으로 10년 동안에 광공업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하였다.

- 이 결과, 충청남도의 제조업체는 ('95) 3,906 → ('06) 6,200업체(2,294업체 증), 산업단지는 ('95) 2,066만평 → ('06) 2,788만평(34.9% 증), 1인당 GRDP는 ('95) 971만원 → ('05) 2,455만원(152.8% 증), 수출은 ('95) 116억\$ → ('06) 390억\$(274억\$ 증), 외자유치는 ('95) 2.2억\$ → ('06) 67억\$(64.8억\$ 증), 그리고 무역수지는 ('95) 67억\$ → ('06) 171억\$ (2.6배)로 증가하였다.

- 4) 또한, 민선4기 상반기의 산업경제면에서 주요한 업적은, 경기도 남부와 의 접경지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확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향후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 5) 마지막으로 20여년 동안 끌어온 장항산단의 대안으로 내륙산단을 정책적으로 확정하는 등 서남부권의 지역개발사업을 가시화하는 성과를 얻어낸 것도 경제면에서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령의 관광산단 등 그 동안 기업유치가 부진하여 빈 땅으로 남아 있던 부지에 기업 및 외자를 유치하여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 민선4기 후반기 충남도정의 산업경제분야 특징 및 과제

- 지역경제는 규모의 특성상 민간부문의 시장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여 경제 스스로 생명력을 갖고 굴러가기보다는, 공공부문이 지역의 미래경제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구체적인 지역산업정책을 통해 구현할 때 활기를 찾고 효율적으로 발전한다.
- 이 점에서 세계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고,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잃어가는 단계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충남으로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경제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산업정책의 정립이 민선4기 후반기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 특히, 새로운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수도권규제 완화, 광역경제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남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의 비전제시와 신산업정책의 정립을 위해서는 충남의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의 특징과 과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한국은행의 자료(충남지역 경제구조의 특징과 발전방향, 2008.2,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를 참고로 충남경제의 특징 및 과제를 정리해본다.

1) 충남경제는 개방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 충남경제는 소비와 생산 면에서 타 지역과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와 교통의 발달에 따른 물류유통의 발달은 개방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충남경제의 돈을 외부로 과거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경제의 취약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 충청지역 경제는 6개 광역 경제권역중 타 지역과 상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절반 정도(49.1%)는 수출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충청지역에서 사용된 제품 및 서비스도 48.0%는 수입되거나 타 지역에서 이입되고 있다.
- 충청지역 민간소비액 중 충청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중(자기지역공급률)도 60.7%에 불과하다. 타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과의 상호의존관계가 가장 밀접하다. 즉, 충청권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 이출액 중 수도권에의 판매 비중이 57.6%이고, 타 지역에서 충청권으로 이입되는 제품 및 서비스 중 수도권 비중이 53.5%로 수도권 의존이 심한 구조를 갖고 있다.

2) 일부 주력산업의 지역경제기여도가 미흡하다.

- 업종별 매출액(2003년 충청지역 산업연관표 산출액 기준)을 기준으로 충청지역의 주력산업을 추려보면, 제조업은 화학제품(전 산업의 11.1%), 전기 및 전자기기(10.4%), 음식료품(7.6%), 수송장비(4.7%) 등. 비제조업은 건설(8.0%), 교육 및 보건(6.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6.5%) 등으로 나타난다.

- 음식료품, 건설, 교육 및 보건 등의 경우 지역 내 부가가치·취업 유발 정도 및 전후방 연쇄효과 등의 측면에서 대체로 전 산업 평균치를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반면, 화학,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등의 업종은 지역 내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 정도가 평균치를 하회하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는 취업유발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기 및 전자기기의 경우 전후방 연쇄효과도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부가가치 또는 취업을 유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생산성이 낮다.

- 충청권의 산업별 취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이 50.9%로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농림어업(21.3%), 제조업(18.4%)의 순으로 농림어업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 비해 10.4%p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전국에 비해 9.7%p 낮은 상황이고, 충청권 서비스업 및 농림어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및 전국산업연관표상의 부가가치를 고용표상의 취업자수로 나누어 계산)은 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9> 산업별 1인당노동생산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충청권(A)	전 국(B)	A-B
농	림	어	업	11	12	-1
제	조	업		78	67	11
건	설	업		39	39	0
서	비	스		37	41	-4
전	산	업		41	43	-2

4) 국외여건 변화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 충남은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수출제조기업이 주력 기업으로 자리잡으면서 충남지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하였다.

GRDP대비 수출 비율은 1995~2000년 중 평균 50%에서 2001 ~2006년 중 60%대 중반으로 상승하였고, 지역 제조기업의 매출액 중 수출 비중도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국 수준을 상회하였고, 삼성전자 등 지역 주력업종인 전자·영상의 매출액대비 수출비중(2006년 기준)은 80% 가까이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도 동 비중이 50%에 근접하였다.

- 충남지역 경제는 이 같은 수출비중의 확대에 힘입어 그 동안 고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이와 동시에 지역 경기가 국외여건 변화에 좌우될 위험이 크다.

5) 생산-소비 및 생산-고용의 연계성 미약하다.

- 지역 내 생산활동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것과는 달리 소비활동은 부진한데, 이 같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간 괴리는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민의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운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자본집약적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하여 부가가치중 지역민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용자보수 비중이 전국보다 크게 낮은 데다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업 등이 취약하여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중 상당부분이 역외 소비로 유출되는 개방형 구조의 결과 지역 내의 생산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소비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이러한 구조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로 고용은 지지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데, 이 같은 생산-고용 간 연계성 약화는 상대적으로 고용 흡수력이 낮은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된 데 원인이 있다.
- 지역 제조업은 2006년 중 GRDP의 45.5%를 차지하여 지역경제내에서의 비중이 압도적이거나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의 40%, 건설업의 55%에 불과하여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고령화 진전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일자리 창출로 젊은 인구의 유입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6) 충남의 서북부와 동남권의 권역간 불균형이 상존함

- 천안, 아산 그리고 당진, 서산을 비롯한 수도권과 인접한 서북부권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 신규투자가 이어지면서 관련기업의 이전 및 설립이 크게 증가한 반면, 동남권은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농업중심으로 구조로 남아 있어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 서북부권은 영상음향(천안·아산), 석유화학(서산), 자동차(천안·아산), 철강(당진) 등 주력산업 관련업체가 집중되면서 충남지역 제조업 부가가치의 80%, 종사자수의 70%, 사업체수의 60% 이상을 차지(2006년 현재)하고 있다.
- 이 같은 권역 간 차이는 기본적으로 산업기반시설의 격차에 기인하는데, 산업단지,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교육 및 편의시설 등이 서북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정력도 서북부권이 여타 권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 충남도내의 균형발전이 민선4기 후반기 경제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대두되고 있다.

III. 민선4기 하반기 산업경제 분야 충남도정 발전방향

- 아래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민선4기 하반기 충남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환경을 강점요소(Strength), 약점요소(Weakness), 기회요소(Opportunity) 그리고 위협요소(Threat)로 정리한 후 충남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본다.
- 특히, 충남이 갖고 있는 강점요소를 바탕으로 부상하는 기회요소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찾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충남경제의 위협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약점을 극복한다면 문제점을 극복하고 충남경제가 지속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충남경제의 SWOT 분석

강점요소(Strength)	약점요소(Weakness)
<p>S1: 한국의 경제성장으로써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력 성장동력 제조업 입지</p> <p>S2: KAIST, 충남대, 공주대 순천향대, 호서대, 고려대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최고급 과학두뇌 배출</p> <p>S3: 3군 본부, 군수사령부, 국방대학교, 국방연구소 등 국방관련기관의 충청권 소재</p> <p>S4: 전국에서 2시간 이내의 접근성이 보장된 교통의 중심지</p> <p>S5: 한국 최고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충청권 소재</p> <p>S6: 금산인삼, 안면도, 보령, 계룡산 등 관광지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에 소재</p>	<p>W1: 충남의 서북부와 동남권의 권역간 불균형</p> <p>W2: 경제성장이 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p> <p>W3: 개방형 경제구조와 수출중심 제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미흡</p> <p>W4: 건설, 음식업 등 서비스업과 농어업의 낮은 생산성</p> <p>W5: 농어촌의 비중이 크고 인구의 고령화</p>
기회요소(Opportunity)	위협요소(Threat)
<p>O1: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으로 인접한 경기도, 충북, 대전과 연계한 경제활성화</p> <p>O2: 새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으로 동북아 R&D 허브지역으로서의 성장잠재력 풍부</p> <p>O3: 황해경제자유구역 출범</p> <p>O4: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환황해경제권 부상</p> <p>O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대한민국의 경제과학행정 중심지로 부상 가능함</p> <p>O6: 충남도청 이전의 가시화</p> <p>O7: 서천 내륙산업단지 가시화</p>	<p>T1: 충남 경제가 과거 10년처럼 고도성장을 쉽게 이룰 수 있다는 낙관적 인식</p> <p>T2: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 어려움 증가 가능성</p> <p>T3: KTX, 인터넷의 발전 등으로 개방형구조를 갖고 있는 충남의 소비유출</p> <p>T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충남의 동력 유출 가능성</p>

○ 충남경제의 SWOT 분석을 활용한다면 충남경제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도내의 불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주력성장 동력 제조업 중심지 지속적 유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극복할 수 있다.

- 경기도와의 광역경제권 정책을 바탕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광역경제권 구상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하여 대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생산성 높은 첨단 고부가가치 제조업 활성화, 충남의 자연환경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노인휴양시설 등 고령화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국방관련 산업 중심으로 충남 경제를 질적으로, 균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도출된다.

첫째, $S1+S4+O1+O3$ =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함께 결합하여 국내외 기업을 유치한다면 제조업을 통한 충남의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업설립 규제철폐 및 조세혜택 등 정부의 지원 그리고 유리한 입지조건을 잘 활용한다면 국내외 제조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둘째, $S2+S3+S5+O1+O5$ = 국방과학클러스터 조성

○ 국방관련 산업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으로 무기의 첨단화, 과학화로 고가화, 고부가가치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산업이다. 또한 무기체계의 복잡성은 과학기술이 밑바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여러 국방관련 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인접해 있는 충남은 국방산업 육성의 최적지이다.

- 즉, 3군 본부, 군수사령부, 국방연구소, 국방대학교 등 국방관련 기관의 소재(S3), 한국 최고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대덕연구개발 특구(S5)의 강점을 바탕으로 충청권에서 배출된 고급두뇌를 활용하여(S2)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 속에서 대덕특구에서 연구한 결과를 인접한 연기군, 논산시 등 충남의 산업단지와 계룡시와 연계하여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충남경제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연기군, 논산시, 계룡시 등의 경제를 활성화하여 충남도내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S5+O1+O2+O5$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첨단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이다.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는데 이러한 혁신주도형 성장은 연구개발투자와 그 성과에 좌우되므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은 미래 성장산업이다. 또한 연구개발서비스업 같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취약한 충남의 지역경제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다.

- 이러한 연구개발서비스 산업은 기본적 인프라(Infrastructure)를 갖추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과학기술과 교육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되므로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충청권에 소재한 대덕특구는 연구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이래 30여년이 흘러 기본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졌고 이제 연구결과가 상업화로 실현되는 단계에 와 있다.

- 이런 점에서 대덕연구단지는 광역경제권 구상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 아래서 충청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교우위의 강점을 가진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대

덕특구에서 창출되는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개발생산지 이루어지는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이다.

넷째, S1+O1+O2+O5 = 충청권 초광역경제 클러스터 구축

- 충청권 광역경제권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천안아산 테크노밸리 조성 등과 같은 충청권의 광역지식집약산업 및 생산집적 단지를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범위의 경제 극대화 및 네트워크 경제의 극대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상을 활용하여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남 서북부권의 천안 테크노밸리, 아산 탕정 크리스탈 밸리,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충북혁신도시 및 오창 과학산업단지의 삼각축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초광역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되어 충청권이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산업구조의 튼튼한 허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경제 활성화는 충청권 초광역경제권구조 속에서 고부가가치의 연구개발의 제조 기능을 담당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 결론적으로 한국 최고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대덕 연구개발특구(S5)와 KAIST, 충남대, 호서대, 순천향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최고급 과학두뇌(S2)라는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강점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O1), 새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상(O2) 등 새롭게 부상한 기회요소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연구개발서비스 및 제조업의 선진국형 구조로 전환되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충청권 공동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유치를 위한 대전, 충남, 충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대덕연구단지, 천안·아산, 오송·오창)의 기술, 기업, 인력 등에 대한 공동 DB구축 운영을 통한 정보지원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S4+S5+S6+O1 = 의료개발 및 서비스산업 육성

- 의료산업은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 의료기술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로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미래 성장산업이다. 특히, 충남은 고령화 속도가 다른 광역시도 보다 높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다.
- 또한 의료산업은 서비스 부문에서 노인인구대상 개호서비스, 고용안정서비스 등 선진국형 의료서비스산업 분야의 일자리창출 잠재력이 막대하므로 의료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면 고용이 많이 창출되어 소득이 발생하고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로 정착되어 충남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제는 일자리도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질 좋은 일자리는 ILO가 권고하는 고용안정성, 직무만족, 그리고 고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말하고, 한국 경영자총협회에서는 정규직의 임금 평균치보다 20% 높은(대졸초임 월평균 182만원을 고려할 때 대졸 초임 2,600만원 이상의 일자리) 일자리를 말하는데 의료서비스 산업은 다수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 따라서 현재 충남 지역의 낮은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의료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치매와 같은 질병의 증가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은퇴 후 거주 지역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잘 제공되는 동시에 가족들이 자신이 치료를 받고 머무는 곳을 방문하기에 입지적으로 편리한 곳을 선호할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과 두 시간 이내의 거리에 인접해 있고, 우수한 자연 환경을 많이 갖고 있는 충남의 서남부권은 노인요양시설 및 실버특구 등 의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 결론적으로,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점을 활용하고(S4), 생명공학과 원자력 분야 등 의료산업분야 한국 최고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대덕 연구개발 특구(S5), 덕산온천, 계룡산, 안면도 등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지(S6)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O1)을 활용하여 충북의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및 대전과 협력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충청권에 유치하고 의료산업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은 질 좋은 일 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O6+O7 = 충남도내 서남부권 발전으로 도내 균형발전 정책 수행

○ 충남도청의 이전과 서천 내륙산단의 가시화, 그리고 보령의 관창산업단지 투자 유치 등은 충남도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즉, 관창공단과 서천 내륙산단을 횡축으로 연계하는 자동차부품 산업축을 형성하여 서해안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연관 부품산업을 육성한다면 도내 서남부권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 본 발표에서는 II장에서 민선4기 전반기 산업경제 분야 충남도청의 평가 및 과제를 정리하였고, III장에서는 민선4기 후반기의 충청남도를 둘러싼 변화된 경제 환경 아래서 산업경제 분야에 있어서 충남도청의 발전을 SWOT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 본 결론에서는 발표의 내용을 정리하고 민선4기 하반기 산업경제 분야 충남도청 운용 방향에 대해 이완구 지사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하면서 마무리 한다.

○ 민선4기 전반기 산업경제분야 충남도청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고도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도성장을 통해서 충남은 대한민국 성장동력산업을 이끌고 있다.

둘째, 이러한 고도경제성장의 배경에는 외자유치 및 기업유치가 있고, 지난 2년 동안 괄목할 만한 업적을 보이면서 지역경제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적을 보여주었다.

셋째, 이러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결과 충남지역 산업구조가 전통적인 농업도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충남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역경제성장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하면서 주요성장동력 산업을 이끌게 되었다.

넷째, 경기도 남부와의 접경지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확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향후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20여년 동안 끌어온 장항산단의 대안으로 내륙산단을 정책적으로 확정하는 등 서남부권의 지역개발사업을 가시화하는 성과를 얻어낸 것도 경제면에서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령의 관창산단 등 그 동안 기업유치가 부진하여 빈 땅으로 남아 있던 부지에 기업 및 외자를 유치하여 활성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성과로 정리할 수 있다.

- 민선4기 후반기 충남도정의 산업경제분야 특징 및 과제로는
첫째, 충남경제는 개방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둘째, 일부 주력산업의 지역경제기여도가 미흡하여 고도경제성장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생산성이 낮다.
넷째, 수출중심의 대기업 제품 산업구조로 국외여건 변화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다섯째, 생산-소비 및 생산-고용의 연계성 미약하여 고도경제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서북부와 동남권의 권역 간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 이러한 특징과 과제를 안고 있는 충남도의 산업경제 분야에 있어서 새 정부 들어서 제시되고 있는 광역경제권 구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 및 수도권 규제완화 등 충남도가 직면한 변화된 경제 환경은 민선4기 후반기 도정운영에 있어서 도전과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산업경제분야 충남도의 환경을 SWOT 분석을 활용해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충남경제의 SWOT 분석을 활용하여 충남경제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도내의 불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주력성장 동력 제조업 중심지 지속적 유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 및 고도경제성장을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을 모색해 보았다.
- 충남경제의 SWOT 분석을 통해 나온 결론은
첫째,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둘째, 국방과학클러스터 조성,
셋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넷째, 충청권 초광역경제 클러스터 구축,
다섯째, 의료개발 및 서비스산업 육성,
마지막, 충남도내 서남부권 발전으로 도내 균형발전 정책 수행 등이 민선4기 후반기 산업경제분야 도정운영 방향으로 도출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충남경제를 질적으로, 균형적으로 활성화하여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충남지사는 후반기 산업경제분야 정책의 기초를 세 가지 관점에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첫째, 지역경제정책의 기초를 성장에 대한 지나친 욕심보다는 물가 안정 등 경제의 안정적인 기초 정착에 우선순위를 두고 운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계경제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경기침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지역민은 삶의 질 하락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서민 경제 및 물가 등을 안정적인 기조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둘째, 충남도의 고도경제성장을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시켜 확대재생산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민의 소득증대로 연결시키는 메커니즘 구축에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
 -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의 향상이다. 가장 바람직한 복지는 일자리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삶의 보람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충남도의 고도경제성장의 결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도내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육성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민과 지역경제로서는 고용 없는 고도성장 보다는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 소재 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성장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한다.

-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내의 서북부권과 내포문화권의 불균형 개발에 따른 양극화 해소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도내 균형발전을 조례 등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수반되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그 동안 고도경제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충남도 내의 불균형 개발과 일자리창출이 미흡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활성화해 나간다면 그 동안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이끌어 온 동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김선기, "지역간 협력 및 상생발전 실태", 열린충남 32호, 충남발전연구원, 2005.10
2. 김정연, "충청권 공동발전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충북지역혁신연구회 공동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06.12.05

3. 대전광역시, 『대전 신경제발전 5개년 계획 : 2003~2007』, 2002.
4. 대전광역시, 『대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 2005~2009』, 2004.
5. 대전발전연구원, 『대덕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2005.
6.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 2000.7
7. 문경원, "수도권 집중과 충청권의 공동발전 방안," 대전지역혁신협의회-한국지역개발학회 공동혁신심포지엄, 2006.12.28
8. 배진한, "대전·충남지역의 일자리창출 정책방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06
9. 산업연구원(2003), 지식기반산업의 지역별 발전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10. 산업연구원(2004), "21세기 충남산업의 발전전략과 과제"
11. 산업연구원(2006), "질 좋은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
12. 산업자원부(2003), "차세대 성장발전전략"
13. 송두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열린충남 30호, 충남발전연구원, 2005.4
14. 육동일, "충남과 주변 자치단체간 상생 발전방안", 열린충남 32호, 충남발전연구원, 2005.10
15. 최효철, "대전·충남지역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성,"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06
16. 충청남도(1999), 21세기 충청남도 지식산업 육성방안
17. 충청남도(2002), 「충남통계연보」
18. 충청남도(2004),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19. 충남발전연구원, 경기발전연구원, "충남경기 상생발전의 잠재력과 과제", 2005.7
20.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충남지역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4. 12.
21.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 현황과 정책대응 방향," 2005. 3.

제3주제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문화·환경 분야 -

안 성 혜 (상명대학교 교수)

최 진 하 (UNDP금강습지사사업관리단장)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문화 분야 -

안성혜 | 상명대학교 교수

I. 서론

본고는 먼저 민선4기 충남도의 전반기 문화 분야의 도정 방향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반기 문화 분야 도정의 발전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에서 제시한 민선4기 후반기 문화 분야의 역점 시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논고를 마치려고 한다.

II. 전반기 문화 분야의 성과와 문제점

1. 전반기 문화 분야의 충남도정의 성과

1) 균형있는 지역발전

- 4대 권역별 성장거점 확보
 - 東 : 행정중심복합도시
 - 西 : 도청신도시, 태안기업도시
 - 南 : 국방과학클러스터, 백제역사재현단지
 - 北 : 황해경제자유구역, 아산만권배후신도시
-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 서남부권 낙후 8개 시·군에 성장동력사업 지원 (5년간 3,000억)
 - ⇒ 4대 성장거점지역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의 틀 마련

2) 품격 높은 문화관광

-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구상 완료 ('08.5), 용역비 10억원 국비 확보 (7월 착수)
-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08~'17, 6,702억원)
 - 공립예술단 공연 확대 : '06년) 213회 → '07년) 239회
 - 문화예술 공간 확대 : '06년) 183개 → '07년) 189개
 - 찾아가는 공연 확대 : '06년) 319건 → '07년) 395건
- Pre-계룡軍문화축제 성공 개최 : '06년) 50 → '07년) 76만명
- 세계인이 모여드는 관광 충남
 -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선정 ('07~'12, 131억원)
 - 문화부 지정 축제 : 7개 선정 (전국 56개 지정 축제 중 최다)
- 강한 체육 실현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
 - 도장애인체육회 설립 ('07.12), 청소년육성센터 개소 ('08.3)
 - 인조 잔디 조성 : 88개소 (운동장 24, 게이트볼장 64)

3) 백제문화제 통합 운영

- 공주·부여에서 격년 개최하던 백제문화제를 53년 만에 통합
 - ⇒ 2010년 「대백제전」 성공개최의 발판과 세계화 기반 마련
- 관람객 급증 : '06년) 60만명 → '07년) 126만명/ 경제효과 353억원
- 국제문화교류 협정체결 : 중국, 캄보디아, 일본 등 3개국

4) 백제역사 재현단지 민자 유치

- 백제테마 아울렛, 콘도, 테마시설 등 역사·문화체험, 엔터테인먼트, 휴양레저가 복합된 「역사 테마파크」 조성
- 민간투자 협약 : 2,500억원 규모 ('07.12)
 - ⇒ 공공성·수익성이 공존하는 관광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 발전

5) 문화제 시·발굴조사 기간 단축

- 문화제 발굴기관 및 인력부족 → 시·발굴에 많은 시간 소요
 - 공사 중단·사업계획 변경으로 투자시기 등 기업경쟁력 상실
- 「문화제 지표조사 및 시·발굴제도 개선방안」 건의 ('08.1.18)

- 문화제청 「문화제 조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08.4.30)
 - ⇒ 문화제 조사 처리기간 단축 (140일 → 40일)

6) 다민족 다문화 상생의 충남 만들기

- 민족간 융합위한 지원조례제정, 쌍방향 문화교육 ('08년 80억원)

2. 전반기 문화 분야 충남도정의 과제(문제점)

1) 전반기 문화 분야에 대한 도민 만족도 평가결과

(1) 문화예술 확충 등 시책이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한 정도

계	크게 효과	어느 정도 효과	보통	별로	전혀	무응답
800명	123	377	225	48	6	21
100(%)	15.4	47.1	28.1	6.0	0.8	2.6

⇒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 62.5% (보통이상 90.6%)

(2) 백제문화제 통합개최가 백제문화 세계화에 미치는 효과

계	크게 효과	어느 정도 효과	보통	별로	전혀	무응답
800명	287	327	123	36	9	18
100(%)	35.9	40.9	15.4	4.5	1.1	2.2

⇒ 효과가 있다고 생각 76.8% (보통이상 92.2%)

2) 2007년 문화관광국 소관 추진사업 자체평가 결과

(1) 사업개요

- 평가대상 : 예산사업 7건
 - 문화예술과 (2건), 관광진흥과 (3건), 체육청소년과 (2건)

<표 1> 2007년 문화관광국 소관 추진 사업

연번	사 업 명	추진부서	집행예산	평가결과
1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과	5,112백만원	우수
2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보존정비	문화예술과	33,704백만원	우수
3	민간 자율 관광수용태세 강화	관광진흥과	65백만원	우수
4	관광객 유치활동 추진	관광진흥과	1,350백만원	우수
5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관광지 개발	관광진흥과	3,060백만원	우수
6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	체육청소년과	32,586백만원	우수
7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 건전육성	체육청소년과	10,526백만원	우수

(2) 종합평가

< 총 평 >

-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역순회공연과 찾아가는 문화 활동,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보존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관광마인드 향상,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투자여건 조성, 불합리한 조성계획 변경, 선진 관광개발 기법 도입으로 관광객 증가
-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용 및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를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

< 추진성과 >

-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공연 확대와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 전개로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 철저한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적 보존·정비와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 및 지정으로 문화도 위상 정립
- 우수민간자율조직 구성 및 지원확대, 차별화된 홍보로 국내·외 관

광충남 인지도 확산,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 유치

-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운영
- 분산된 청소년 유사업무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한 (재)충남청소년 육성센터 설립 추진

< 보완·개선 할 과제 >

- 공립예술단의 지역 간 균형적인 공연과 운영주체의 지역 내 집중 공연의 개선 필요
- 민간자율 관광개선 유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 태안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한 서해안 지역 관광객 유인대책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차량지원비 예산부족으로 운영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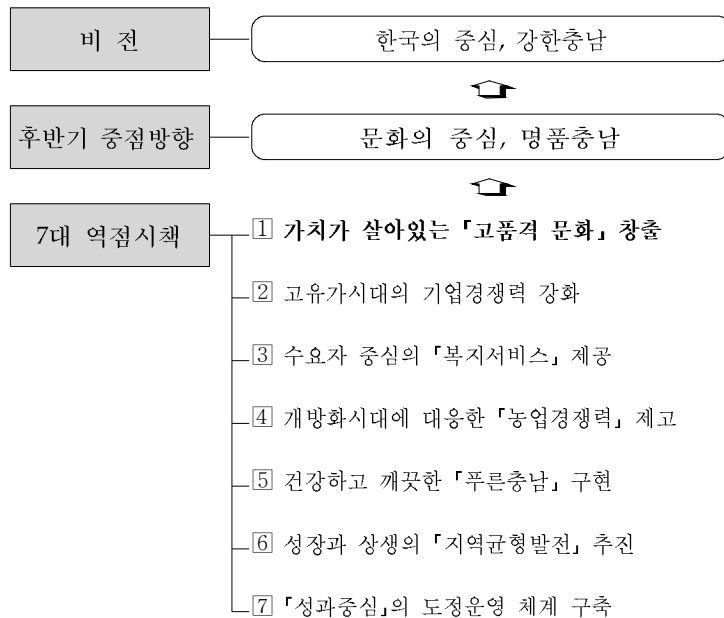
III. 하반기 문화 분야 도정방향

1. 충남도에서 제시한 하반기 문화 분야 도정 방향

1) 기본방향

- 「창의와 도전, 실천행정」의 역동적인 도정 수행
- 「문화의 중심, 명품 충남」 ⇨ 한국의 중심으로 도약
 - 문화와 경제,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광의의 「문화」
 - 문화자원 극대화 → 삶의 질 향상, 가치창출, 성장 동력화

<그림 1> 도정운영의 기초



2) 역점시책 : 가치가 살아있는 「고품격 문화 창출」

(1) 「문화중심도」 실현

-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본격 추진 ('08~'17, 6,702억원)
 - 순수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저변확대, 문화재단 설립 등 문화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의 세계화에 중점
- 문화체육 관광분야 조직 보강
 - 문화산업과 신설 : 창조적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관광산업과장 : 외부 전문 인력 채용, 관광마케팅 기능 보강
 - 백제사 전문가 채용 : 백제사 연구 및 교류 전담팀 구성

(2) 백제문화의 세계화 기반 구축

< 단계별 추진 전략 >

- 1단계 ('08 ~ '10) : 공주·부여중심의 기반조성
- 2단계 ('10 ~ '13) : 전 시·군 확대, 육성
- 3단계 ('14년 이후) : 서울한성백제, 전북익산과 공동발전

- 제54회 백제문화제 변모 ('08.10.3~10.12, 150만명 목표)
 - 대표 프로그램 : 6개 (국제문화 교류촌, 황산별 전투 재현 등)
 - 기간 확대 : 5일 → 10일, 예산액 : 40억 → 80억
 - 야간프로그램 보강 : 총59종 중 야간프로그램 16종
 - 프로그램별 책임 PD제 운영
 - 주민참여 확대 : 백제옷 등을 값싸게 제작·판매
- 「2010 大 백제전」 성공적 개최 (50일간, 200만명 목표)
 - 기본계획 수립, 국제행사승인, 국비 확보 등 완벽한 준비
 - 인프라 구축(공주 아트센터), 2009 Pre-대백제전 운영
 - ⇒ 세계역사도시 연맹 회원도시 (50개국 75개 도시) 참여 유도
- 「해상 백제로드 크루즈 운항」 추진
 - 구상 : 일본 나라현 - 당진항 - 중국 상해 간 취항 (2010년)
 - 나라현과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 ('08. 7월중)
- 백제역사의 세계화
 - 한·중·일 백제학회 설립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주관 ('08. 7)
 - 연구발표, 백제홍보, 국제학술교류 참여, 학회지 발간 등
 - 백제문화제 한·중·일 국제학술 세미나 ('08. 10)
 - 한·중·일 백제문화 심포지엄 ('09년 일본 큐슈)
 - ※ 제2회 한·일 심포지엄 개최(일본 동경, '08. 6)
 - 「구다라 웹사이트」 개설 : 백제역사 Web서비스 제공(일본어)
- 백제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 → 2010년 목표
 - 대상 :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등
- 백제역사 재현단지 민간투자사업 추진
 - 체험+숙박+엔터테인먼트+레저가 복합된 역사테마파크 개발

- 제3자 제안내용 공고 등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이행
⇒ 2010년까지 숙박, 테마파크 시설 우선 완료
-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 2008~2030(22년간), 1조 3,000억원, 문화유산 발굴·복원 등
⇒ 2010년까지 선도 사업비 40억원(국비), 군·특 등 1,000억원 초기 집중투자 계획

(3) 활력있는 관광중심 道 실현

- 「2010 지역방문의 해」 유치(공모사업) : 충청권 공동 유치 협의
- 지역특성 살린 차별화된 관광지 개발
 -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테마관광지 및 태안기업도시 조성 등

(4) 창조적인 콘텐츠 산업 육성

-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 디자인 컨버전스 센터 건립 (60억원) : 디자인기업 창업 지원
- 백제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 애니메이션, 게임 등
- 軍문화엑스포 추진
 - 2008 계룡軍문화축제 (10.14~10.19) : 건군 6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
→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기반 조성
 - 정부주도의 세계軍문화엑스포 개최 준비

(5) 스포츠가 활성화된 충남 구현

- 인조 잔디 조성 ('09~'10) : 84개소 (학교20, 게이트볼장64)
-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회원 증대 및 소외계층 참여 확대
- 청소년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 4개소/ 6,300백만원

(6) 성장과 상생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 대단위 개발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
 -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개발촉진 지구, 아산만권 신도시 등
-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건설
 - 문화가치를 중시한 도시계획 기법 도입,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

- 공공디자인을 통한 명품도시 조성
 - 도시 랜드마크화, 공공 건축물 디자인 공모를 통한 건립
 -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확대 → 전 시·군으로 점차 확대

IV. 문화예술 중심의 가치창출 방안

1. 충남문화산업의 현황

1) 문화산업의 개념 및 범위

- 협의의 개념 :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상품의 부가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
- 광의의 개념 :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창작되거나 상품화되어 유통되는 모든 단계의 산물들
- 경제학적 개념 : 문화를 소재로 상품화하여 유통하는 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문화산업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됨³⁾
 - 영화와 관련된 산업 /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음반·비디오·게임과 관련된 산업
 -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수집, 가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장 제2조 제1항, 2003. 5. 27 개정

※ 문화상품이란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등의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함⁴⁾

※ 문화콘텐츠 :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⁵⁾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문화콘텐츠산업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영화, 방송, 인터넷/모바일콘텐츠, 에듀테인먼트콘텐츠 등으로 구분
- 『2006 문화산업백서』 : 저작권 라이선싱, 영화·비디오·DVD,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만화, 모바일콘텐츠,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캐릭터, 정기간행물, 방송, 광고, 출판, 공예, 공연, 디자인 등의 16가지로 분류

2)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

- 국내 콘텐츠시장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기업규모로 수익성 악화, 낙후된 유통체계, 저작권 제도 미비,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민간부문 투자가 저조한 실정
- 대기업은 기존 제조업 중심 사업의 성장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콘텐츠 사업 분야로 진출
 - 주로 온라인 콘텐츠와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영화, 드라마, 인터넷 포털, 게임, 음원, e-러닝 등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배급 및 유통의 사업형태
- 현재 문화콘텐츠산업의 흐름은 디지털 컨버전스의 가속화, 문화콘텐츠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온라인 및 모바일에 기반한 영상콘텐츠 서비스의 고도화로 진행
 - 2000년대 중반부터 공급자 중심의 콘텐츠 시장이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콘텐츠의 멀티 플랫폼화가 화두
 - 웹2.0 시대, UCC 시대의 OSMU 전략, 멀티 플랫폼화 전략과 콘텐츠 확보를 통한 콘텐츠 업체 간의 제휴나 M&A 활발

4) 미디어문화교육연구회(2005), 문화콘텐츠학의 탄생, 다올미디어, pp.25-26

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5), 문화콘텐츠는 미래경쟁력이다

- 통신업체는 IPTV, WiBro, DMB 등 뉴미디어 콘텐츠를 확보하여, 기존의 통신·방송 시장을 넘는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
- 문화콘텐츠 산업화에 필요한 각 부문의 법·제도 정비, 중장기 발전 전략, 인프라 기반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3) 충남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

(1) 문화콘텐츠 관련 대학 및 전문 인력현황

- 충남지역 내 18개 종합대학과 7개 전문대학에 문화콘텐츠관련 학과는 154개로, 한 해 동안 7,529명의 전문 인력 배출
- 종합대학 집적률은 7.4%로 전국 4위
- 예술에 기반을 둔 대학 관련학과가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디지털음악, 문화기획, 영상예술, 패션, 공연문화, 다중매체 미술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
- 대학원의 콘텐츠관련학과 및 전공은 32개 학과
- 충남지역 문화산업관련 연구기관은 총 70개이며, 대학부설 연구기관은 50개에 해당되나, 문화콘텐츠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학부설 연구소는 17개소에 해당됨⁶⁾
- 영화·영상 관련 연구소는 4개, 애니메이션, 게임(에듀테인먼트 포함), 콘텐츠기획·경영 분야 연구소가 각각 11개, 그 외 방송과 음악 관련 연구소 2개로 나타나고 있음

※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대학 졸업생의 지역취업 한계와 지역 대학원 진학을 기피함으로써 콘텐츠 창작 및 기술개발의 연구기반 취약
- 문화콘텐츠 관련 고급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연구지원 체계 필요
- 충남지역 내 대학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적인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개발기관의 설립
-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개발 장려정책을 통한 킬러 콘텐츠 발굴

6)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2007), 『충남CT산업 기반조사』와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재구성한 것임.

- 고급 문화콘텐츠 창작인력의 연구개발 성과물과 산업체가 연계되어 문화콘텐츠 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하는 원스톱(one-stop) 방식의 문화콘텐츠상품화지원센터 구축

(2) 충남지역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체 현황

- 16개 도시 대비 충남지역 문화산업 종사자 비율은 0.5%(648명), 지역 매출액 비율 0.5%(1,021억 4,900만원)로 매우 낮음⁷⁾
- 문화산업입지계수 : 전국대비 최하위권
- 충남의 문화산업은 천안지역에 영화, 게임, 출판물 중심으로, 당진에는 방송, 캐릭터를 중심으로 몰려 있으며 대전과 가까운 논산에는 방송, 출판, 영화기업이 분포되어 있음
- 충남지역 문화콘텐츠 관련사업체는 총 128개로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에듀테인먼트, 영화/영상, 출판, 디자인, 광고, 기반기술 분야로 분류되어짐⁸⁾

<표 2> 충남의 CT 사업체 현황

구 분	조사기업 수	비율(%)
애니메이션	5	3.9
방송	12	9.4
음악	0	0.0
게임	4	3.1
에듀테인먼트	5	3.9
영화/영상	12	9.4
출판	23	18
광고	0	0.0
기반기술	24	18.8
간접관련분야(디자인)	43	33.6
합 계	128	100

- 충남지역별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체 현황을 보면 천안시에 74개의 업체가 집적되어 있음 (전체의 57.8%를 차지)
- 콘텐츠를 가공·홍보하여 상품화하는 디자인분야의 업체가 많음

7) 문화관광부(2006), 2006 문화산업통계

8)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2007), 충남 CT산업 기반조사

- 콘텐츠를 창작·개발하는 중소벤처는 취약한 실정으로 간접관련분야인 디자인과 기반기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충남지역에서 61개 업체에 지나지 않음

※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충남지역별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체는 영세한 수준
-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체에 대한 명확한 통계자료와 업체현황 등의 DB구축 부족
- 충남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는 업체 중점 육성 필요
- 각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이 창업을 하여 충남지역에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충남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관의 현황

- 충남 자치단체의 문화산업진흥 관련 업무는 문화예술 지원, 문화산업(축제) 총괄, 문화재 관련, 관광산업 지원 등
- 충남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는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테크노파크 등 총 30개 기관
- 충남의 CT 지원기관은 천안시에 12개로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고, 문화시설 역시 천안시가 15개로 가장 높으며, 공주시가 8개로 그 뒤를 이음⁹⁾
- 충남테크노파크의 주요사업 : 지역혁신체제(RIS)운영, 창업보육지원, 연구개발, 지역전략산업 육성, 인력양성, 장비구축 활용, 기술이전, 교류협력, 기업지원 등
- 충남영상미디어센터 : 디지털영상, 3D영상분야를 중점 육성분야로 선정하고 사업화(창업)지원, 공동기술개발, 선도 기업유치, 특화분야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역영상산업을 중점 육성
-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및 비전제시,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IT/CT 관련 공용장비구축, 기술지원, 기업지원, 영상이벤트사업 등

9)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2007), 충남문화산업발전전략

※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충남 문화콘텐츠산업 현황의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구축
- 콘텐츠 창작 및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를 상품화하고 유통하는 단계별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수립의 필요성
-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R&D 센터, 디자인상품화지원센터, 산학협력 창업보육센터 구축
- 문화콘텐츠 관련 대기업 유치로 매체별 유통의 확보
- 주민, 대학, 지역축제와 연계한 문화콘텐츠 페스티벌의 개최

2. 충남 문화산업의 육성 방안

1) 지역기반의 문화산업 진흥 사례

(1) 경기디지털진흥원

- 애니메이션, 게임 등 창의성 있는 디지털문화콘텐츠 조기 발굴 및 지원과 우수 전문 인력 양성
- 디지털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결성으로 지원환경 개선 및 확대
- 동북아 글로벌 디지털문화콘텐츠 네트워크 구축
- 영상, 게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을 통해 부천을 문화콘텐츠 도시로 발전 계획
- 문화·관광·레저 연계형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전략으로 창의적인 문화 환경 조성

(2)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 국가균형발전과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모델 창출을 목표로 2004년 3월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발족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
- 2004년부터 3,000억원 지원, 2023년까지 5조 3000억원 투자 예정
- 아시아문화와 자원이 상호 교류되는 문화중심도시로 육성 계획
- 문화발전소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시설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으로 랜드마크 구축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광주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도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 지역 문화자산의 개발 및 물적 인프라 구축, 문화벨트 구축 및 중·소 거점 연계, 생태문화축 조성
- 기초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 임방울 판소리 등 전통예술부터 광주비엔날레 등 현대예술까지 광주지역의 기초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영상, 게임, 음악, 공예, 디자인, 에듀테인먼트를 집중 육성

2) 단계별 문화산업 진흥정책의 수립

- 1단계 : 문화콘텐츠산업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단계
- 2단계 : 문화콘텐츠상품 개발단계
- 3단계 : 브랜드 가치화 단계

<표 3> 충남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사업단계 및 추진목표

단계		단계별 사업 추진 목표
1 단계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창작 및 개발 인프라 구축 지역기반 전문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구기반 R&D 센터 :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채용 ② 산학협력 창업보육센터 : 벤처·중소기업 육성, 창업지원 ③ 디자인상품화지원센터 : 공예, 패션, 주얼리, 전시, 토이, 산업 디자인, 포장, 웹, 이벤트 등을 통해 콘텐츠의 가공 및 상품화, 홍보 마케팅 지원 산·학·연·관 연합 네트워크 혁신체계 구축 충남디지털콘텐츠페스티벌 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2 단계	문화상품 개발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반 R&D 센터 : 문화원형 및 소재 발굴, OSMU형 콘텐츠 개발기획, CT기술개발 산학협력 창업보육센터 : 지역기반 산업체 양성 디자인상품화지원센터 : 콘텐츠의 상품화, 마케팅 및 홍보 대기업 유치 : 콘텐츠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시스템 구축 스타 문화콘텐츠 창작 충남디지털콘텐츠페스티벌 정착 : 문화콘텐츠산업의 붐업
3 단계	브랜드 가치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디자인 : 지역이미지 확립과 경제적 성과의 공동성장 관광 상품 개발 : 충남지역 브랜드를 상징하는 관광 상품 개발 문화체험 공간 구축 : 유통·전시·체험·판매·소비 기능을 집적한 문화체험 공간 페스티벌과 연계한 축제/이벤트디자인

3) 충남 문화산업의 발전 방향

(1) 충남 문화자원의 콘텐츠 개발

- 독특한 문화원형(Archetype)을 소유한 문화자산의 확보
 - 백제문화의 유·무형 자원과 문화원형의 DB 구축 노력
 - 충남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국 문화자원의 9.0%가 분포되어 있고, 전국에서 5번째로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남¹⁰⁾

- 충남의 전통문화자원, 역사자원에 비하여 콘텐츠 자원이나 상품자원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¹¹⁾
- 문화자원 개발전략 : 개발 가능한 문화자원의 발굴, 문화자원과 공간과의 연계성 강화, 문화 공간 기능의 복합화 추구, 지역의 문화 브랜드 개발이 핵심 키워드임¹²⁾
- 지역의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문화자원의 유형화 필요
 - 문화자원 개발은 현재 해당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이미지에 따라 기존 이미지 '강화', 부정적 이미지의 '개선',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로 개발 유형을 설정
-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발 단계
 - 지역의 고유한 문화원형 구축 단계
 - 문화원형의 스토리텔링 단계
 - 스토리텔링의 멀티미디어화 단계
 - 상품화 단계
- 지역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 유형화하여 콘텐츠로 제작한 뒤 이를 관광자원으로 브랜드화하고 상품으로 활용

(2) 문화관광 인프라와 시스템의 확충

- 문화예술 진흥정책 : 순수예술 진흥을 위한 토양 조성
 - 순수예술은 국가브랜드·이미지 형성과 창조적 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나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
 - 대표 예술단체, 공연기관 육성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 :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자원화
- 문화와 산업, 교육, 관광, 체육 등을 결합한 시설의 복합화
 - 지역의 문화적 특성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유적과 공원, 경관 등 문화 환경의 정비
 -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지역디자인, 공공디자인의 개념

10) 문화제청(2006), 지정문화재 총괄현황

11) 충청남도(2006), 충남통계연보

12) 삼성경제연구소(2004), 문화자원의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도입으로 공간적 질 확보

- 문화산업단지는 그 자체가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
- 장기적 육성계획 수립으로 충남지역의 정체성 반영
- 역사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한 복합문화 공간 조성
 - 문화관광 콘텐츠의 전시·판매 공간 조성
 - 문화예술행사, 문화콘텐츠 박람회를 개최하는 가변형 복합 공간
 -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레지던스 운영
 - 세계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관광지 조성
-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사업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
-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탈거리 등 관광시스템 구축

(3) 지역문화와 연계된 관광 상품개발

- 문화예술의 관광 상품개발
- 풍부한 지역문화, 자연자원의 활용으로 독창성과 흥미를 갖는 테마 상품 개발
- 지역적 특색 반영한 상품품목과 형태의 다양성, 독창적인 소재와 재료, 디자인의 질적 향상 필요
- 장소마케팅 전략 : 고유성 확립으로 지역특화 이미지와 지명도 상승 효과, 관광마케팅, 문화상품의 브랜드 육성
-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적 기반 확립으로 문화적 공감대 형성, 자금심 고취, 소득증대, 고용창출, 지역전문가 양성

V. 결론

문화소비계층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일반 시민의 문화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시설보다는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점점 더 필요해 지고 있다. 이제 지역개발에 있어서 문화 콘텐츠는 기존의 콘텐츠 분류 영역에 지역공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곧, 문화와 환경은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불가분의 관계로 통합되고 장소마케팅 전략으로 경제적 가치를 낳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충남의 문화전략은 백제역사재현단지를 활용한 문화 환경 정비 및 활성화 사업으로 충남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백제문화제 중심의 지역축제 구성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창출'하는 유형으로 지역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민선4기 충남의 문화산업 육성전략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주로 역사단지 및 문화산업지구 조성 등의 하드웨어 중심이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 개발전략과 예산 지원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성공적인 지역문화콘텐츠 개발¹³⁾과 활용이 문화산업 발전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지역민의 전반적인 문화적인 삶에 활력소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충남은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지역문화콘텐츠, 생명력이 있어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원형 구축단계이다. 즉, 지역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한 뒤 이를 관광자원으로 브랜드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의 민선4기 후반기 문화 분야의 도정의 방향은 이를 단계별로 지원하는 중장기적 육성정책과 지원체계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이란 지역문화(특수성)를 소재로 하되 이를 보편적 가치로 환원하는 탈지역화의 단계를 거쳐 세계화(보편성)를 지향하는 콘텐츠로 재탄생시킨다는 의미

[참 고 문 헌]

1. 충청남도(2008), 민선4기 전반기 충남도정 종합회견 자료
2. 충청남도(2008), 도지사공약총괄보고서 자료
3. 충청남도(2008), 충청남도 2008 주요 업무계획 자료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장 제2조 제1항, 2003. 5. 27 개정
5. 미디어문화교육연구회(2005), 문화콘텐츠학의 탄생, 다홀미디어
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5), 문화콘텐츠는 미래경쟁력이다
7.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2007), 충남CT산업 기반조사
8. 문화관광부(2006), 문화산업통계
9.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2007), 충남문화산업발전전략,
10. 문화제청(2006), 지정문화제 총괄현황
11. 충청남도(2006), 충남통계연보
12. 삼성경제연구소(2004), 문화자원의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환경 분야 -

최진하 | UNDP금강습지사업관리단장

1. 서론

환경 분야를 언급하기 전에 두 가지의 편린에 대해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한 가지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과정에서 주인 된 유권자는 과연 얼마나 당당하면서 오랫동안 그 권한과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지구적 패러다임으로써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충남도정의 이해 정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의 선거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학연·혈연의 벽을 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광역의 경우 해당 정당의 압력에 좌고우면하기 어렵게 감시시스템이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가고 있는 점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4년마다 선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재임기간동안 위치에 걸맞는 치적을 쌓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쳐야 함으로 다수의 단체장들이 자신의 공약사항을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도입, 점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광역지자체 또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16개 광역지자체단체장의 공약이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경북, 경남, 부산, 충남의 지자체는 당선 후 공약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지자체로 평가되어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다행이라 생각한다. 내용을 보면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지역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수렴

하였으며 정기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표 1> 이행계획서 우수 작성 지자체 및 관련사례

지자체	단체장	우수사례	평가계획
경상북도	김관용	공약사항 등 주요도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실시후 결과 공표	-6월 중간평가, 12월 최종평가진행 (자체평가) -이행실적 부서 평가 실시 -평가결과 공개
경상남도	김태호	이행계획서 작성과정에 전문가 및 연구기관 참여, 연도별 추진계획 및 일정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음. 공약관리체계, 관리계획 등이 잘 정비되어 있음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결과공개 (홈페이지 활용)
부산광역시	허남식	당선 후 지역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이행계획서 작성.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 역할분담 및 협력 체계구축	-연2회 공약추진상황 평가, 결과공개 (홈페이지 활용)
충청남도	이완구	타 후보자 공약 6건 수용 및 추진.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군수분류, 공약에 대한 추진 상황 별도 관리	-도지사 선거공약 추진 연1회 개최
서울특별시	오세훈	취임 100일을 맞아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작성·발표. 연도별추진계획 및 일정, 달성목표, 확인지표 등이 잘 정리되어 있음.	-
전라북도	김완주	당선 후 이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 실시 후 반영	-
강원도	김진선	이행계획서에 공약추진일정, 추진계획, 소요예산 등이 잘 정리되어 있음.	-
제주도	김태환	각 정책별 2010년도 달성목표지표를 제시하여 향후결과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있음	-

자료 :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2008), 매니페스토 이행현황과 평가의 중요성<표4>, p.11

충남의 경우 당선 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 후보자의 공약 6건을 수용하여 좋은 선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6개 시장, 군수의 공약을 분류하여 추진상황을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 등이 좋은 사례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대다수의 단체장들은 재임기간에 실현가능한 공약에 집중하다보니 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기피하고 꼭 필요한 지역사업임에도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약에서 제외하는 이중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선거 판세가 일방적으로 우·열세가 판단되는 지역은 더욱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민선후반기 이후의 정책 전반의 재평가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인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행정복합도시의 설치에 관한 명확한 액션플랜을 제시하여¹⁴⁾ 늦은 감은 있으나 지자체와 지자체간,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II.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환경과 연관성이 깊은 분야를 선정하여 후반기 도정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우선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점검하기로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올여름의 날씨가 심상치 않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산업화의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변화의 속도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이다.

“안테산맥과 함께 열대지방에 있는 동부아프리카 킬리만자로산의 만년

14) 정부는 7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행정복합도시 ‘탄소중립(CO2-Neutral) 도시’로 조성해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추게 하고 우수대학과 연구소 등 유치대상을 내년까지 확정해 2012년부터는 본격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나 충남도와 협의를 했는지는 미지수이다.

설은 그 양은 많지 않지만 온도 변화에 민감해 녹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 해발 5,895m의 킬리만자로산에 있는 만년설은 지난 20년 동안에만 33%가 줄었으며 1912년과 비교하면 82%나 였었다. 미국 오하이오대학의 로니 톰슨 교수는 “이 만년설은 2015년쯤 모두 녹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는 2003년 1월 한겨레 신문에 올라 킬리만자로 산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예측은 빗나갔고 지금 킬리만자로산 정상에는 만년설을 볼 수 없다. 그 정도로 지구온난화는 과학적 연구를 무시하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적 차원의 환경위기에 대한 경고로써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¹⁵⁾에서 소극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세계자원 소비추세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비정상적인 개발만능주의의 폐해 극복을 논의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세계 160여개국 정상들이 모여 개최된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국가운영의 기본지침으로 선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담긴 AGENDA21을 발표하였다. 이 회의 이후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로 2007년 발간된 IPCC보고서¹⁶⁾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지구적 차원의 위험을 강력 경고함으로써 그 정점을 찍게 된다.

이것은 정부는 물론 광역지자체의 환경적 패러다임이 기후변화를 대처하

15) 이 보고서는 로마클럽 최초의 제 1 보고서이다.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은 1968년 로마에서 창립된 후에, 제 1 보고서가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제목으로 1972년에 출판되었다. 자원과 환경의 미래에 대한 기초개념은 1968년 4월부터 로마클럽의 지원을 받아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25개국, 70명으로 구성된 과학자, 교사, 경제학자 및 산업계 인사에 의해 정립되었다. 로마클럽의 연구목적은 인류의 미래에 축에 관한 검증을 하는 것이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1970년에 시작하여 1972년에 완료되어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란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16)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회의)는 전 세계적인 조직으로 1988년에 창설되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안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에 발표한 제4차보고서 작성에 2,500명 이상의 과학자들과 130여개 국가가 참여하여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는 체계로 하루빨리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 이전에 인류생존의 중차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충남도는 2007년 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T/F팀을 도지사 지시에 의해 구성하고, 2008년 현재는 충청남도기후변화대책추진본부(이하 기후변화본부)를 구성하고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앞선 정책이긴 하나 구조적 시스템이 각 부서 간 연결고리가 약해 좀 더 세밀한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후변화의 핵심은 친환경적인 자원순환과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을 생존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나은 에너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체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절약형 에너지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나 기술력과 제정의 뒷받침이 열악하여 온실가스 감축 추진 등 기후변화의 핵심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최근 각 기업들이 앞다투어 태양·바람·지열·바이오연료 등 자연의 선물을 현명하게 이용(Wise-Use)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태양이나 바람을 활용한 에너지사업 분야의 투자가 중부지방에 위치한 충청지역보다는 영호남지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만 수도권의 물류에 유리한 중화학산업의 편중된 유치로 인해 차후에 발효될 예정인 온실가스총량제 등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태안군이 신재생에너지특구로 지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적 리더의 역할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강력해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로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하나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수동적인 절약대책에 대한 수사적인 홍보를 벗어나 이제는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에너지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¹⁷⁾ 등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기업은 물론 일반가정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17) <http://www.rec.or.kr> 참조

록 액션플랜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새롭게 시행하는 공공디자인방식이나 행정기관 증·개축, 대형건물 및 일반주택 신축 시에도 자발적 혹은 강제적 에너지 절약대책은 물론 지원 대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대책팀의 보완 등을 통해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능동적 행보 필요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가 공통으로 조화되고 협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은 지속가능발전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첫째, 사회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구축노력과 둘째, 사회·경제적 정책을 개발할 때 환경 총량을 고려하는 환경보전노력, 그리고 개발계획 시 자연환경의 재생산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과 정책마련이 가능한 의사구조 확립 등에 대한 Agenda 도출이 중요하다.¹⁸⁾

민선4기 도지사 공약에서도 충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은 초기 5대 과제 중 중점공약 사항이었으나 이후 9개 과제로 보완되면서 논리 및 설치근거의 연구가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실로 이관된 이후 하위개념인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생태환경체험교육장 건립, 친환경상품 공공의무 구매확대 등 타 공약에 비해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위원회 설치 및 운용방안의 공표를 통해 공약이행은 물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외식적인 위원회의 설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가 직면한 급진적 개발에 대한 친환경적인 보완제 역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개체 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 시스템구축이란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각 부처(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서도 민관파트너십을 중요시하고 아이디어 교환 및 합동평가를 통한 환류(feed-back)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¹⁹⁾ 충남도의 빠른 행보를 기대해 본다.

18)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2007),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방안 연구, pp.19~21.

3. 공약점검과 하반기 환경정책 방향

충남도에서 발간한 민선4기 2주년 공약이행 실적자료에 보면 환경생태분야는 9건<표 2 참조>으로 문화 복지를 제외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면 경제·통상 분야 18건 지역개발 12건과 비교할 때 양적차이는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 고도의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이 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환경·생태분야 공약이행 실적

공 약	2008년 말까지 추진계획	비 고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구축	용역완료, 비옴토지도 9개 시·군 추진	2차 용역 수행 중
금강 및 삼교호 수질 II급수로 획기적 개선	연기군 등 4개 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등	-
수질총량관리센터 설치 운영	기초조사 실시, 수질개선 대책마련 및 기술지원	1,496백만원
생태환경 체험교육장 건립	북부권 교육장 준공, 남부 및 서부권 타당성 검토	1,300백만원 예정
사구 및 갯벌보전사업 강화	오염방지시설(1개소) 추진	434백만원
친환경상품 공공의무구매확대	조례제정 추진	10월중 구매촉진 교육실시
충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조례제정 추진	기획실 이관
천수만·금강하구 생태공원 명소화	조류생태전시관등 공사발주 추진	-
실버환경감시단 운영	활동범위 확대검토	612백만원

주 : 충남도(2008), 민선4기 2주년 공약이행 실적자료 편집정리

19) 환경부의 경우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써의 활용과 시민 동참을 위한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지자체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활성화방안(2008.7.7)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환경·생태분야의 특성상 대형사업(금강 및 삼교 수계 수질 II급수 개선 사업, 천수만·금강하구 생태공원 명소화 사업)의 경우 국비의 확보가 우선 시되는 사업으로 충남도 환경관련 부서의 노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도지사의 부처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사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전반기 충남도에 대한 언론자료 등을 살펴보면 투자유치 및 대형건설 사업에 단체장의 활발한 홍보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으나 환경 보전형 투자사업은 특성상 투자대비 효과의 측면이 늦게 도출되는 관계로 자칫 관계부서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후반기는 투자유치 상위권 도정의 연속성 계승과 아울러 환경보전 상위권 지자체로 거듭나는 것도 상호간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경우 국고투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도비를 주축으로 한 사업임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는 별도로 물관리대책본부의 발전적 계승과 수질우수마을 선정지원 사업의 확대, 습지보전실천계획수립, 전국적인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는 도량살리기 사업(연기 숲천골 사업 등)의 광역사업화, 그리고 충남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상수도사업 확대, 서해안 오염의 저감 및 모니터링연구를 위한 센터건립 등에 관심이 요구된다.

III. 결론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한다. 그만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현실에 직면해있는 것이다.

민선4기 후반기에 들어설 즈음의 충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할 주체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도시·환경·에너지 통합형의 충남도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개별적으로 분절화 되어 있는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시 계획내용이나 개발 사업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종합적인 고려가 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에너지기본계획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두 차례 수립되어 왔으나 단기적이고 개별법령에 의한 계획으로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이 미약하고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적 차원에서 계획수립이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남도가 향후에 도출하고 지켜 나아가야 될 전략과제로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토대로 도시계획, 환경계획, 에너지계획, 관련행정계획 및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가동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지역발전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7),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진단 및 기본 전략수립지침 작성.
2.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2007),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방안연구.
3. 충청남도(2008), 민선4기 2주년 공약이행 실적자료.
4.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2008), 충남도지사 메니페스토 이행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운동가 워크숍.
5. 충청남도(2007),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6. 충청남도(2008), 충청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 조사 연구.
7. WCED(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8. <http://www..rec.or.kr>
9.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86426>

제4주제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지역개발 분야 -

최 봉 문
(목원대학교 교수)

민선4기 하반기 충남도정 발전방향

- 지역개발 분야 -

최봉문 |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I. 서론

- 충청남도(이하 충남)는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역동적 변화”를 일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자 및 기업유치, 수출 등의 경제부문의 성장지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음.
-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방대 논산이전, 백제문화재 통합 개최, 보령-안면도간 연륙교건설사업 및 서해선 철도건설사업 추진,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등 ‘강한 충남’ 건설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
- 현재 충남 민선4기(2006~2010)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 및 지역개발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충남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세종시(행복도시)의 차질 없는 진행과 관련 파급효과의 흡수 노력
 - 둘째,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이 될 홍성·예산에 건설되는 도청이전지의 신청사 건립 및 신도시 건설 추진
 - 셋째, 최근 신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충남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최소화
 - 넷째, 도내 지역 간 인구분포의 불균형과 산업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역 내 균형발전의 과제 등임.

- 본 원고는 충남의 민선 10년을 되돌아보고 국가정책의 방향과 도정 방향에 따라 향후 충남 도정이 고려해야 할 지역개발 분야의 쟁점 사항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사업을 제시하기보다는 고려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함.

II. 민선자치 10년의 충남 도정

1. 시기별 도정 중점시책²⁰⁾

1) 민선자치 1기(1995. 7~1998. 6)

- 충남의 민선1기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지방 행정 조직 내부의 자치역량 강화”를 도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목표로 도정을 운영함.
- 충남의 지역발전 차원에서는 「4대권 개발경영구상」 및 「충남 New hope 21」을 수립하여, 충남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함.
- 지역의 인프라 차원에서는 「충남정보화 선언」을 통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보령담을 건설하여 수자원을 확보함.

2) 민선자치 2기(1998. 7~2002. 6)

- 민선자치 2기는 민선자치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의 발전기반을 확대하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함.
 - 충남의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및 생산기반을 확대함.
 -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긍지와 자신감 고취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

- 주요 성과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선언,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 및 여가 산업 육성,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충남 선언」 등임.
- 지역경제의 건설화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3) 민선자치 3기(2002. 7~2005. 6)

- 민선자치 3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촉진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역내부의 자치역량과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됨.
- 주로 충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Heart of Korea)으로 육성하는데 치중하였음.
- 전국 차원에서는 “지방분권 촉구선언”을 주창하였으며, 지역적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룸.
 - 첫째, 전국 최초로 농업테크노파크를 개원함.
 - 둘째, 내포지역을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지정받아 현재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 셋째,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기능적 연계를 위해 서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을 구축함.
 - 넷째,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석문공단 및 장항산업단지 건설 등을 추진함.

2. 충남 민선4기 도정방향

1) 도정의 여건 변화

- 도정의 여건 변화를 자치행정분야, 도시·지역개발분야, 관광개발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20) 김용웅, 충남의 민선자치 10년 성과와 향후과제, 열린충남 2006.1에서 정리

○ 자치행정분야²¹⁾

- 첫째, 개발위주의 시대를 지배해 온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주민 참여와 민간역량의 증대에 따른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전환되어가는 사회체제로의 적응이 필요함.
- 둘째, 중앙집권적이고 중앙정부 의존적이던 종전의 하향식 체계에서 지방화·분권화의 시대로 바뀌어감에 따라 분권형 사회 체계에 적합한 새로운 행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셋째,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에서 직접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는 주민참여 증대와 강화가 필요함.

○ 도시·지역개발분야

- 세종시 및 도청이전 신도시, 태안 기업도시 건설 등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와 충남 내륙을 관통하는 서천~공주간,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 기반 인프라 구축
- 신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세종시 건설의 변질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 기업 감소, 타 지역과의 입지경쟁에서 열세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위협요인이 발생함.
- 지속적인 저성장 고령화의 문제, 특히 노령인구가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기존 도시들의 노후화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관광개발분야²²⁾

- 소득증대,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변화, 주5일 근무제 도입, 삶의 질 추구 등 관광산업 활성화의 긍정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충남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관광산업의 창출과 새로운 관광단지의 개발이 요구됨.

2) 도정 현황의 SWOT 분석

<그림 1> 충청남도의 지역 및 도시개발 여건

기회요인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교류의 중심지로서 유리한 입지성 · 우수경관과 생태자원 보유 · 지역 내 다양한 문화·역사·관광자원 보유 · 지역 내 풍부한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지역 간 공간 통합성 미흡 ·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 심화 · 농·어촌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 약화 · 미약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기회요인	위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도시 건설과 중추행정기능 이전 · 홍성·예산지역에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 서해안·내륙지역 접근성 개선 · 환황해권 생산·교류거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주요기능 유출 가능성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활력 저하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생태 파괴 · DDA, FTA 확대에 1차 산업 경쟁력 약화

III. 충남 지역개발의 변화요인 검토

1. 국가차원의 도시여건 변화

1) 사회여건 변화

21) 육동일(2006), 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 -자치행정분야-, 열린충남 2006. 7

22) 윤양수(2006), 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 -관광개발분야-, 열린충남 2006. 7

(1) 인구구조의 변화

- 국가적 인구성장율의 저하로 현재 군 단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감소현상을 향후 5년 내지 10년 이내에 많은 도시들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지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전국인구의 15%가량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농촌지역은 초고령 사회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이나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의 부부가구나 1인 가구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문제

-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한 세수가 줄게 되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전반적인 도시경영능력을 저하시킴.
- 인구의 저성장 또는 감소는 도시의 전체적인 토지이용수요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수요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도시기능도신규주택수요가 줄고 기존시기 환경의 노후화가 촉진될 것이며, 상업지구의 활력유지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 출산율 저하에 따라 관련 도시 시설의 이용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과 재교육시설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고령화와 독신가구 증대에 따른 도심회귀 등의 새로운 토지이용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기존 시가지의 재정비 및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도 전망됨.

2) 경제여건 변화

(1) 지식기반경제의 심화에 따른 도시양극화

-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창조계급이 도시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가진 대도시는 계속

성장하고, 중소도시는 인구와 산업의 유출로 침체되어가는 도시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

(2) 소득계층의 양극화, 고용 불안정의 심화

- 전통적인 제조업이 쇠퇴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산업구조전환에 따라 계층별로 소득구조의 양극화 심화와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기술인력과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고용구조에 심대한 지각변화가 예상되며,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른 실업대책이 요구됨.

(3) 소득증대에 따른 복지·문화·참여·환경 등 요구 증대

- 소득수준의 증대와 노동시간의 감소 등으로 문화적 소비욕구가 증대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가 보편화되면, 도시민들의 생활양식이 개인적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분산적으로 집적되는(복지·문화·참여·환경 등의 요구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정책의 수요가 등장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이용한 새로운 도시경쟁력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됨.
- 도시정책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4) 외국인 거주자 증대에 따른 도시사회의 다양화

- 국가별로 자생적인 외국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활성화되고 있어, 외국인과 문화갈등을 예방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통합적 사회정책이 필요함.

3) 도시의 물적 환경 변화

(1) 대도시의 개발용지에 대한 수요증대

- 대도시로의 경제활동의 집중은 대도시권에서 개발용지에 대한 수요

를 증대시켜, 가용토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용적율, 용도기준, 토지이용규제방법 등이 도시정책의 주요변수로 등장함.

(2) 도시생활권 및 경제권의 광역화

- 전국에 걸친 고속철도의 연결과 고속도로망 확충, 일반도로의 고속화 등의 교통여건 개선과 광역 대중교통수단 보급 및 개인승용차의 보급 확대 등의 교통수단발달은 일상화된 광역적 도시생활권을 형성함.
- 중심도시로의 생활권 광역화가 예상되고, 광역경제권으로써 산업연계를 고려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계획개발을 위한 광역적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4) 기타 변화

(1) 자원 및 에너지부족에 따른 문제

- 한정된 자원의 고갈과 고유가 시대에 요구되는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의 필요성 증대와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이용을 촉진

(2) 친환경 및 자원순환형 도시건설 및 관리 요구

- 도시공간은 생물다양성이 확보된 생태환경 속에서 고차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생태환경을 구축하고, 동물의 이동, 바람이나 물 등의 자연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구조를 만들어 내도록 함.

(3) 정보화

- 미래도시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라 할 수 있으며, 고도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유통량이 급증하며, 일상생활에서 정보가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u-City 등 첨단도시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과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2. 충남의 지역개발 정책 검토

1) 지역개발 기본방향

(1) 2013년 세종도시 건설

- 2030년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는 행정기능 관련 공공기관 중심의 세종시를 중심으로 특정 기능 중심의 공공기관과 연계된 혁신도시의 건설에 따라 새로운 네트워크형 국토의 교류체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함.
- 세종시의 건설이 충남 내부에서 하나의 섬처럼 작용하여 주변의 개발여력을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 되지 않으며, 주변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건설의 효과를 도내에 균형적으로 파급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²³⁾

-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지역의 중추적 관리기능 및 중심성 확보라는 상징적 효과뿐 아니라 신도시 건설에 따른 막대한 경제효과와 고용효과를 도전체로 파급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세종시의 건설로 야기될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조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임.

(3) 고속 교통망의 개통과 공간구조의 통합²⁴⁾

- 2009년까지 사천-당진간, 당진-대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해안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등에 이어 지역내부를 관통하는 고속간선도로망으로 연결된 공간통합을 달성할 수 있게 됨.
- 수도권이나 세종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염려도 있지만, 자동차 등을 통한 지역접근성의 향상으로 지방중소도시들의 여가 및 관광기능을 강화하고,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유치를 통한 특화가 필요하고, 저성장 또는 쇠퇴하는 도시 환경에 대한 도시계획과 관리의 방

23) 임재명(2006), 충남도청 이전효과, 열린충남 2006. 4

24) 정순오, 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 - 도시·지역개발분야-, 열린충남, 2006. 7

침을 준비해야 함.

2) 지역개발 발전전략 (4대 개발경영권과 6대 정주생활권)

- 충남의 지역개발에 관련된 발전전략은 4대 개발경영권과 6대 정주생활권으로 구분됨(<표 1>, <표 2> 참조)
- 4대 개발경영권의 전략은 생산, 물류, 전통문화, 생명산업, 근교농업, 휴양 등의 여섯 가지 전략으로 구분

<표 1> 충남 4대 개발경영권역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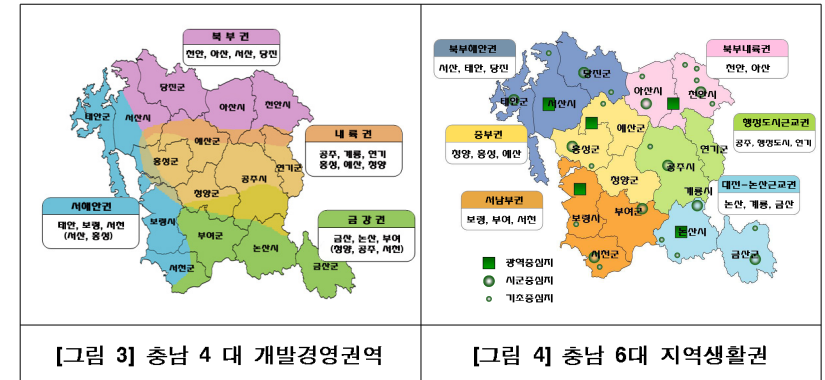
권역별	대상지역		개발방향
북부권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예산, 연기)	아산만권 개발의 거점, 서해안개발의 교두보
서해안권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당진) (논산)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 해양휴양·관광의 메카
백제권	공주, 부여, 예산, 청양	(공주, 부여, 서천, 청양)	전통문화·청정환경·첨단녹색산업 융합 지대
금강권	논산, 연기, 금산		물류·유통과 첨단생명산업·도시근교 특화농업지대

자료 : 정순오(2006)

<표 2> 충남 6대 정주생활권역과 4대 개발경영권의 비교

6대 정주생활권역 / 대상지역		4대 개발경영권역 / 대상지역		
북부해안권	서산, 당진, 태안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예산, 연기)	북부권
북부내륙권	천안, 아산			
남부해안권	보령, 서천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당진)	서해안권
중부권	홍성, 예산, 청양			
백제고도권	공주, 부여	공주, 부여, 예산, 청양, 논산, 연기, 금산	(논산)	백제권
대전근교권	연기, 논산, 금산			
			(공주, 부여, 서천, 청양)	금강권

자료 : 정순오(2006)



3) 권역별 현황과 과제

(1) 북부권

- 북부권의 산업화는 이미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입주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등 수출주력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산업들의 입지로 활발하게 가시화되고 있음.

- 북부권의 과제는 연관 산업들의 동반입주가 원활해지도록 산업용지와 도로 등 인프라시설을 기민하게 확충하는 동시에 산업인구의 안정적 정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환경의 개발을 촉진하는 일임.

(2) 서해안권

- 휴양관광기능 개발은 태안 안면도를 비롯하여 서산, 보령, 서천에 이르기까지 국제자본의 유치를 통한 개발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 여가수요의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고속도로로부터 주변 도시로의 연결도로망은 여전히 불비한 탓에 곳곳에 병목구간이 잦은 정체를 유발하여 관광인구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서해안 개발의 파급효과를 신속하게 흡수해 내기가 어려운 실정임.

(3) 백제권

- 백제권은 백제문화권개발에도 불구하고 부여를 중심으로 한 고도보존정책의 부진으로 '선 고증-후 개발'의 등식이 잘 실현되지 않고 있음.
- 고도 부여에 대한 과감한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므로 정책적 결단을 끌어내려는 노력이 매우 큰 과제임.

(4) 금강권

- 금강권은 일단 대전과 행복도시권의 근교농업지역으로 잠재력이 확보돼 있지만, 청정농업지역으로서 인정이 필요함.
- 첨단농업과 농업 연관 바이오산업의 접목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날로 높아질 지가에 대응하는 생산성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이며, 재배시설에 대한 한 차원 앞서 가는 투자와 품질 유지를 위한 수준 높은 연구개발을 겸한 교육 시스템과 더불어 효과적인 마케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IV. 민선4기 후반부 지역개발 방향제안

1. 민선4기 전반부 평가

1) 지역균형발전 체계구축

-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시스템(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균형발전특별회계) 구축
- 금강권의 균형발전 기본·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강권 광역복합개발사업 추진
-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서해안까지 통합하여 시행됨으로써 서해안 지역의 균형발전의 기회로 작용
- 국방대 논산이전 확정으로 충남 서남부권의 성장동력을 마련

2) 도청신도시 건설과 세종시 지원

- 도청이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청이전신도시내 인구유입시설(산업시설, 대학 등) 유치
- 행복도시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도시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화 노력 경주

3)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 주민참여형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좋은 아파트 커뮤니티 만들기 시범사업,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도심 중심가로 시범사업 등 추진

2. 민선4기 후반부 정책 기본방향

1)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과제

(1) 인구저성장에 따른 신·구시가지의 계획적 관리

- 성장하는 도시는 일방적인 신개발추진을 억제하여 기존시가지 쇠퇴를 방지하고, 쇠퇴하는 도시는 대형판매점, 종합병원, 문화회관 등의 대형도시기능을 기존시가지에 집중시켜 노후시가지와 도심 및 근린상업지역을 활성화함.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환경조성

-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사회적 경쟁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도시(social city)'를 조성함.
- 사회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 집단별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지역 내에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함.

2) 경제변화에 대응하는 과제

(1) 도시화의 연착륙을 위한 도시 간 격차 해소

- 향후의 도시화는 인구저성장 내지는 감소에 의해 도시별로 도시발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중소도시 간의 성장 및 쇠퇴에 따른 도시환경의 격차를 줄이거나 차별화와 개성화를 도모하여 도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도시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의 안정화

- 인구저성장파 탈산업화 시대에 도시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산업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중핵도시는 투자, 생산, 생활의 장으로서, 또한 타 업종 간 교류촉진 등 산업을 일으키는 장소로서, 첨단도시공간과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경제구조를 개선시키도록 유도함.

(3) 주민주도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 생활권별 주거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안정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적 주거환경의 질을 보장하도록 함.
- 지역사회의 현장상황을 반영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에 의한 주거환경정비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는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함.

(4) 창조적 발전을 위한 문화환경의 다양성 수용

- 개방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도시에서 문화적 다양성 확보와 인종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상호 공존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함.
- 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다문화체험거리를 지정하여 이를 육성함.

3) 물적 환경에 대응하는 과제

(1) 도시성장에 대응한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도시재생

- 도시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광역적 도시성장관리가 중추가 될 것이므로 생활권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증대를 위해, 광역적 연계가 가능한 광역산업기반시설 계획도 주요한 도시성장관리정책이 될 것이고,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도시의 생활권 재편과 재정 부담을 효율화하기 위한 광역적 성장관리와 자율적 통합을 유도함.

(2) 광역적 도시관리체계 검토

-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체계에 걸맞은 개별 도시정책 간 위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대도시권 도시정책, 수도권 도시정책, 중소도시의 도시정책 등이 자율성을 가지고 활성화되어야 함.

(3) 성숙기 도시의 안정화를 위한 도시내부 정비제도 검토

- 향후 도시성숙기와 쇠퇴기 등에 대응하고 자원 절약적 도시공간구조

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시내부에 대한 정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구축함.

(4) 지역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도시경관 조성

- 지역민에게 익숙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적 특색을 발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동시에 전통을 현대화한 도시경관을 유도함.
-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가로공간에서 보행자위주의 인간적인 도시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공공공간에 대해 가로시설물, 광고물, 야간경관 등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함.

(5) 지역의 성장원동력으로서 문화환경 기반구축

- 지역의 성장원동력으로서 미래성장산업인 예술가와 문화콘텐츠 창작을 육성하고 건축, 가로경관 등 문화환경을 구축함.
- 도시 전역에 문화집적지구를 지정하여 장르별 예술가 등의 창조적 활동 공간(장소)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배치하여 창조활동의 중심지를 조성함.

4) 기타 변화에 대응하는 과제

(1)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시공간구조 구축

- 기존 시가지를 고밀도로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중심개발 등 다양하고 유효한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고,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교통을 포함한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킴.
- 대중교통이용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육성하고, 고밀개발을 통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약적 토지이용을 유도함.

(2) 친환경 및 자원순환형 도시공간구조 구축

- 대기환경, 수환경 등 환경오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하부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기후변화를 유발하

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약형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을 구축하도록 함.

- 자연환경보전을 배려한 토지이용계획, 친환경적 건축물 및 인프라의 설치, 생태녹지축 및 생물서식지구의 조성, 비오톱의 형성 등 미래지향적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함.

(3) 편리한 정보통신기반 확충

- 첨단정보통신기반은 미래도시의 경쟁력으로써 새로운 첨단정보의 창출과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의 극대화를 지원하며, 행정,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첨단정보기술을 적용하여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함.

3. 충남 민선4기 후반부 지역개발 정책 제언

1) 정책기본방향

(1) 도시경쟁력 제고

- 지역특성을 살린 성장관리정책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여 살기 좋은 도시 조성
- 권역별 특성화 및 1시간 광역 생활권 기반(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천안·대전과 전철 연계) 구축
- 산업구조 고도화로 일등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관련 규제외 획기적 개선(수요자 관점에서 토지이용 규제 제검토 개선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

(2) 살기 좋은 충남 계획 수립

- 살기 좋은 도시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주도에 의한 주거환경정비를 추진·유도할 수 있는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
- 인간 중심적인 도시경관 조성으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창조사업(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도심 중심가로 시범사업 등) 추진

(3)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교통과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이용 활성화 계획(보행자 및 자전거 중심의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 유도) 수립

(4) 지역균형발전계획 추진

- 행복도시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통한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 및 충남의 중소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재생
- 금강권광역복합개발을 통하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뿐 아니라 대규모 기반시설(경전철 등) 설치 등을 추진
- 백제문화권 및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통하여 역사·문화·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쇠퇴지역에 새로운 가치 창출

(5) 명품 신도시 조성

- 자족성 확보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특구 조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국제적인 명품 신도시 조성
-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고도의(유비쿼터스 : ubiquitous) 정보서비스가 도시공간에 융합되는 최첨단 도시 조성

2) 지역개발 중점과제

(1) 도시성장관리 정책 모색

- 도시정책분야에서 토지이용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생활밀착형 규제와 기업규제요소의 불합리한 요소 개선

(2) 도시재생 정책 추진

- 도시내부시가지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6년)에 기반한 다양한 도시정책 추진
- 기존의 물적 환경정비에 치우치지 않고, 장소의 역사성·정체성, 지역의 공동체 구성, 주민참여형 도시설계, 합리적 개발이익환수 등을 위한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협력체계 마련

(3)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속 추진

- 국가균형개발차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수용하기 위한 행정 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의 차질없는 신도시 건설

(4) 낙후도시 성장관리 정책 추진

- 지방중소도시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등과 같은 특별 제정의 제공,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특별프로그램의 강구, 지역특화지구조성 등과 같은 특별개발제도의 운용 등 지방 중소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5) 도시환경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 도시환경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주민 주도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 추진

IV. 결론

- 충남은 세종시,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등 건설 분야의 많은 호제에 힘입어 강한 충남의 건설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투자유치 총액 35조 5,000억 원이라는 기록을 세움으로써 '경제 제1도'로서의 위상을 굳혔다는 점이 민선4기의 전반 2년간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됨.
- 또한 충남 서북부 해안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로 엄청난 위기가 닥쳤음에도 그칠 줄 모르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과 봉사로 위기를 극복하는 등 도 전체의 강한 단결심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임.
- 그러나 이제까지의 충남의 성과는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첫째는 국가차원의 정책과 시대적인 흐름에 동반한 성과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러한 성공은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세종시의 계획변경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많은 위협을 받고 있어 자체의 성장 동력과 잠재력을 활용한 성장이 필요하고, 인적자원과 행

정능력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또 다른 문제는 충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불균형이 점차 심화된다는 점으로, 고속도로 등 지역 간 접근성이 개선되고 새로운 도청이전 신도시와 세종시, 기업도시 등의 개발과급효과를 지역에서 균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연계 확산시키는 정책을 강화하고, 기본적으로 과급효과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기반 여건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참 고 문 헌]

1. 국토연구원(2008), 미래도시정책연구방향 수립연구(안), 2008. 4
2. 김용웅(2006), 충남의 민선자치 10년성과와 향후과제, 열린충남 2006. 1
3. 육동일(2006), 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자치행정분야-, 열린충남 2006. 7
4. 윤양수(2006), 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관광개발분야-, 열린충남 2006. 7
5. 이상호, 임윤택(2006), 미래도시 충남수도의 개발방향과 계획원칙, 2006. 4
6. 이외희외(2006), 경기도 지역·도시행정 정책기조, 경기논단, 2006. 여름
7. 임재영(2006), 충남도청 이전효과, 열린충남 2006. 4
8. 장연정(2008), 민선 4기 후반기 시정운영 발전 방향, 민선4기 2년결산과 후반기 시정운영의 발전방향 세미나 발표문, 2008. 6
9. 장연정(2008), 새 정부 출범과 충남도의 발전과제, 열린충남 2008. 4
10. 정순오(2006), 도청이전과 충남지역 발전방안, 2006. 4
11. 정순오(2006), 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도시·지역개발분야-, 열린충남 2006. 7
12. 충청남도(2007), 도정백서

_____ M. E. M. O _____

_____ M. E. M. O _____

_____ M. E. M. O _____

_____ M. E. M. O _____

[illegible]